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회

차 례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회 개요 5

발표 A그룹

- 1. 청년, 리스타트 9
- 2. We want you to stay 프로그램 12
- 3. 독거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웰다잉 보험’ 15
- 4.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애말기돌봄 18
- 5.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에이블 위드 서울(Able with Seoul)’ 정책 ... 21

발표 B그룹

- 1. 여성 노숙인의 가시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27
- 2. 청년형 상병수단 30
- 3. 개나리 학교(재소자, 재소자 자녀가족 복지) 33
- 4. 엄마아빠와 아이가 행복한 행복 놀이터 36
- 5.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39

발표 C그룹

- 1. 청년 마음 다독이기: 당신의 봄은 안녕하십니까? 45
- 2. 서울시 청·장년층 1인 가구 통합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제안 48
- 3. 서울 청년참여소득 51
- 4. 슬기로운 알바생활(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54

발표 D그룹

- 1. 사회혁신 채권 도입을 통한 폐지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59
-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경제 자립 정책패키지 “새봄로드” 62
- 3. 서울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마스터플랜 65
- 4.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크리에이터 ‘통 큰 플러스’ 68

발표 E그룹

- 1. 노노시장(老老市場) 조성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 73
- 2. 2030 청년 여성 맞춤형 팀스포츠 지원정책 “자유로운 몸을 향한 도움닫기” ... 77
- 3. 장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80
- 4. 한 끼를 부탁해 (아동·청소년 영양 불평등 해소) 83

‘청년, 서울시 복지정책을 겨루다’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발표회 계획

목 적

- 현장과 연구가 결합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모델 발굴
-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복지 정책 생산 경험의 기회 제공
- 정책제안 내용에 대한 당사자,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정책화

일 시 : 2018.10.27(토) 13:30~18:00 (4시간 30분)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대상 : 정책제안 참가자 및 시민평가단 등 총 200여명
 - 정책제안자 총 90명(22개팀), 시민평가단 100명, 전문가 평가단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주관 : 서울시복지본부, 서울복지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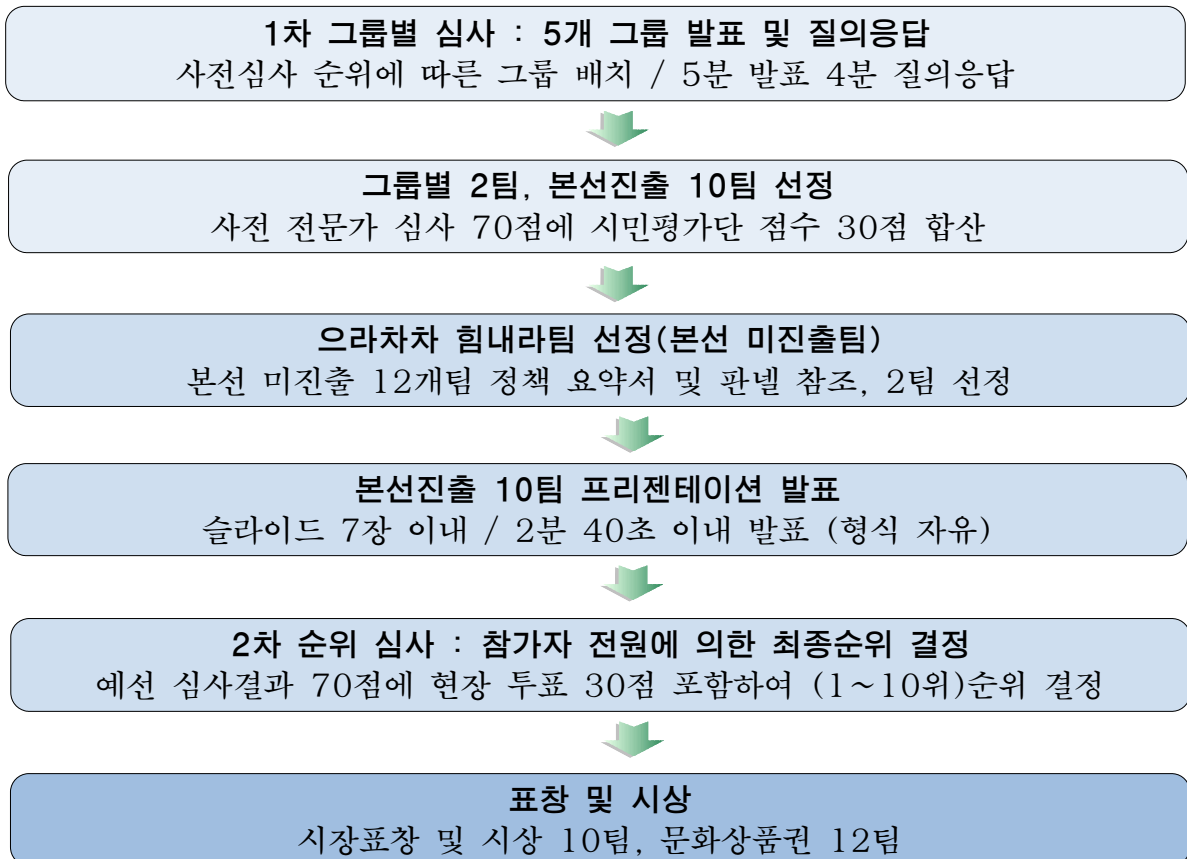
표창 및 시상 : 총 시상금 1,220만원 (22개팀)

훈 격	선정 수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팀	시장상 및 시상금 3백만원	
최 우 수 상	2팀	시장상 및 시상금 각 2백만원	
우 수 상	3팀	시장상 및 시상금 각 1백만원	
장 려 상	4팀	시장상 및 시상금 각 20만원	
으라차차 힘내라상	2팀	2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노 력 상	10팀	10만원상당 문화상품권	

□ 세부일정

시 간	구분	주요내용
13:30~14:00	등 록	○ 참가팀 확인 및 등록 ○ 그룹별 좌석 안내
14:00~14:20	오리엔테이션	○ 개회 ○ 인사말씀 : 김교성 한국사회정책학회장 ○ 행사 취지 및 진행방법 안내
14:20~15:30	1부. 정책장터	○ 그룹별 정책제안(판넬제작) 발표 (5그룹)
15:30~16:00	휴식	○ 1차 그룹별 심사결과 정리 및 결선 진출팀 선정
16:00~17:40	2부. 정책겨루기	○ 축하공연 : 타악공연팀 '젬베콜라' ○ 격려사 :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Top10팀 PPT 발표 및 최종 결과 투표
17:40~18:00	마무리 (강평 및 시상)	○ 심사결과 강평 : 남기철 심사위원장 ○ 시상 : 황치영 복지본부장 ○ 기념촬영

□ 발표회 진행순서



발표 A그룹

1. 리스타트

청년, 리스타트

2. 사나래

We want you to stay 프로그램

3. 살맛나게 살자

독거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웰다잉 보험’

4. 임이랑 양이랑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애말기돌봄

5. 중앙서울유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에이블 워드 서울(Able with Seoul)’ 정책



팀 명	리스타트
제안명	청년, 리스타트
제안요지	청년 노숙인에 맞춤형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청년 노숙인을 발굴하여 사회복지 체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지를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청년 노숙인은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제안요약	
<p>1.청년 노숙인 정책의 필요성</p> <p>왜 ‘청년 노숙인만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존재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기존의 노숙인 시설 이용자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인 현실에서 청년 노숙인의 기존 시설 이용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로부터 시작된다. 과연 소수의 청년 노숙인이 다수의 중장년층 사이에 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이 생애주기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인가? 현재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청년 노숙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인가? 에 대한 고찰 속에서 본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다.</p> <p>1) 청년 노숙인과 중장년 노숙인의 생애주기적 차이</p> <p>청년기는 독립을 이행하고 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는데 반해, 중년기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현행 노숙인 지원 체계는 이처럼 다른 특징을 가진 두 집단에게 단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정책은 다수 이용자인 중장년층을 위주로 이루어져, 소수의 청년들은 소외되기 쉽다. 청년 노숙인은 청년 정책에서도, 노숙인 정책에서도 케어 받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 확보가 필수적이다.</p> <p>2) 시설중심적이고 현물제공 중심적인 기존의 노숙인 정책</p> <p>청년 노숙인들은 대개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지지체계망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정하다. 이에 단순한 의식주, 현물 제공 서비스 위주인 기존 노숙인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지지체계와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들의 효과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p>	

2. 정책의 내용



1) 청년쉼터

청년쉼터는 청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종합지원센터다. 청년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일시보호서비스, 문화·교육 서비스, 정서 서비스, 청년공유주택 운영·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이때, 청년쉼터는 의식주 관련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시설과는 달리, 다양한 문화·교육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효과 :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사회에 나아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청년들만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한다.

-의의 : 중장년 노숙인의 생애와 구별되는 청년 노숙인의 생애를 반영하여, 기존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대상자를 발굴하고 현행 사회복지 체계에 포함시킨다.

2) 청년공유주택

청년공유주택은 다수의 청년 노숙인이 '셰어 하우스'형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지원받는 새로운 노숙인 지원 체계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개인공간을 가지되 주방·화장실·거실 등을 공유한다. 또한, 청년 노숙인의 주거공간에 청년쉼터의 사례관리자를 파견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효과 : 청년공유주택은 청년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며 사회성을 증진하고 정서적 지지체계망을 형성하며 청년 노숙인의 외로움, 고립감을 해소시킨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서비스 개입을 할 수 있다.

-의의 : 안정적인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청년 노숙인을 탈노숙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3) 아이캔(I CAN)폰 : 통신비 지원 정책

아이캔(I can)폰은 노숙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통신비를 일부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 대상은 '청년 노숙인(만 18~39세) 중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로 하며, 청년쉼터를 통한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효과 : 노숙인이 스마트폰 구입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직활동, 각종 정보 취득 및 대인관계 형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립심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의 : 복지, 구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노숙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정보기본권'을 실현한다. 동시에 정보적 측면에서 자립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3. 기대효과

1) 개인적 측면

본 정책을 통해 청년 노숙인은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다. 청년쉼터의 자원봉사활동, 자조모임, 다차원적인 일상생활 증진 교육 등은 청년 노숙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심층적인 정서서비스는 청년노숙인의 정서적 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청년 노숙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

2) 사회적 측면

본 정책을 통해 청년 노숙인을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다. 이들은 탈노숙할 수 있는 자원이 중장년보다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더 큰 탈노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는 노숙인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3) 복지적 측면

본 정책을 통해 사적 관계망과 공적 지원체계 형성으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노숙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팀 명	사나래
제안명	We want you to stay 프로그램
제안요지	<p>‘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을 가슴속에 항상 품고 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가 위험에 빠졌거나 재난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소방공무원들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지만 현 소방공무원 관련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분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으로 알코올 의존이 높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 찾아오며,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가게 된다. 소방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일반인의 6배를 뛰어 넘는 수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알코올 의존 관리 We want you to stay 프로그램을 제안한다.</p>
제안요약	
<p>소방공무원분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잦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으로 알코올 의존이 높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 찾아오며,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알코올 의존 관리 We want you to stay 프로그램을 제안한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pre> graph LR A[열악한 근무환경] --> B[스트레스, 트라우마] B --> C[알코올 의존] C --> D[불면증] D --> E[자살 생각] </pre> </div> <p>□ We want you to stay 프로그램</p> <p>‘우리는 당신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혹은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존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이 더 이상 알코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에 머물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생각해보며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p>	

□ 대상

서울시소방공무원분들의 알코올 의존 정도를 측정 평가를 하여 3가지로 분류(1. 알코올 의존도 하, 2. 알코올 의존도 중, 3. 알코올 의존도 상) 한다. 그 후 각 군에 맞춰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소방공무원의 알코올 의존 예방 교육 실시, 알코올 의존자 관리 및 치료, 알코올 의존자 사후관리, 가족 관리를 진행한다.

□ 알코올 의존정도에 따른 개입 방법

1. 알코올 의존도 하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알코올 의존도를 측정하고, 올바른 알코올 섭취 방법, 중독 예방 교육 실시한다.

2. 알코올 의존도 중

알코올 의존 예방교육 실시, 올바른 알코올 섭취방법 교육, 정신보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알코올 의존 예방

3. 알코올 의존도 상

정신보건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 관리, 중독 가정 관리, 사후관리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상담 및 면담, 지역 자원과 연결하여 알코올 의존 재발 방지.

□ 세부 개입 방법

1.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소방 알코올 의존 전문 사이트 및 전화번호를 만들어 중독 관련 질문 및 상담 진행.

2. 소방공무원 알코올 의존 예방

- 소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알코올 의존도 측정 설문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검사받는다.
- 정신보건 전문가는 각 소방서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방공무원들에게 알코올 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알코올 의존자 관리

알코올 의존은 쉽게 재발할 수 있어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중독으로 인해 낮아진 자아존중감,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옆에서 도움을 주고 지지해 줄 옹호자의 역할로서 정신보건 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4.가정방문

사회복지사가 직접 클라이언트의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환경을 알아보고, 가정 내에서 누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알코올 의존 원인(근무환경,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준다.

5.가족관리

알코올 의존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주어 가족들 또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하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역에 설치된 알코올 상담 센터에서 단주모임과 가족모임, 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 기대효과

- 알코올 의존 예방 교육을 통해 알코올로 인한 문제들이 감소할 수 있다.
- 기존에 존재했지만 이용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위 프로그램은 이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통해, 우울증 및 트라우마, 알코올 의존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 상담을 통해 출동 시 우울 및 트라우마, 알코올로 인한 출동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 공무원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 이 법으로 가입이 금지되어 그들의 환경 개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처리해주는 존재가 아니다. 분명 인권이 존재하고,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할 권리도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장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방공무원들은 꾸준한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안서를 제공하는 바이다.

팀 명	살맛나게 살자
제안명	독거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웰다잉 보험’
제안요지	본 제안은 현 시대에 상황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꼭 지향해야하는 사람됨에 가치 실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독거노인이 혼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며 포용하기 위한 사전, 사후를 책임지는 통합적 정책 제안이다.
제안요약	
<p>1. 정책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p> <p>가. 독거노인과 고독사의 급증</p> <p>□ 독거노인의 수는 2005년 서울시 인구대비 7.1%부터 시작하여 2016년 서울시 인구대비 12.7%를 기록하였고 2018년 4월 기준으로 약 29만 명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독사’라는 개념이 함께 대두 되었으며 그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변화된 사회적 가치에 맞추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효과적으로 부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p> <p>□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지난 2011년 693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실제로 전국의 독거노인 74만 명 중 16%인 11만 8,000명은 가족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1~2회 정도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곧 고독사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속에서 무연고자를 발굴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며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p> <p>나.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 서비스의 분산</p> <p>□ 60대 이상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사례는 서울시 내에 모든 자치구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최대 6~8%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독사가 발생하는</p>	

빈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첫째 자치구별로 노인 인구수의 차이 둘째 자치구별로 복지환경의 차이 등이 있다. 이는 자치구 별로 복지환경에 따른 투자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현재 서울시 내에서 몇몇 복지시설과 민간시설이 임종체험 등과 장례관련 사전, 사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지만 그 사례와 서비스 수혜자가 적을뿐더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분산되어 있고 지역별로 고독사의 추이가 다른 만큼 웰다잉 서비스의 양과 질 또한 차이를 보이며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웰다잉 보험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정책 제안 내용

가. 독거노인을 위한 웰다잉 보험

□ ‘독거노인의 웰다잉 보험’의 수혜자는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중 무연고자와 서울시 거주 독거노인 중 자치구 관할센터 추천을 받은 자를 합하여 총 1000명, 1년으로 한정 한다. 수혜자들은 생전에 웰리빙 준비, 장례문화체험 등과 같은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구성된 웰다잉 교육을 주 1회 두 달 간 진행하도록 한다.

□ 독거노인은 생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이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독거노인의 웰다잉 보험’에서 독거노인의 존엄한 죽음을 시신 인도, 유품정리 및 거주지정리, 장례식과 같이 보장한다.

□ 서울시와 민간보험업체의 협약 사회공헌서비스로 재원의 부담을 완화함과 함께 각 자치구의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기관은 자원 조달 및 대상자 선별을 추진한다.

가) 수혜자 선정기준

대상 구분	서비스 대상자 산출근거	단위 수(명)
일반 대상	서울시 전체 인구	9,799,075
위기 대상	서울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1,394,933
표적 대상	서울시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288,599
클라이언트 대상	서울시 독거노인 중 사업대상자 1,000명	1,000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2018년08월 기준, 서울시 독거노인 현황 (연령별/구별) 통계
2018년 04월04일 기준

나) 서울시 역할

□ 독거노인 웰다잉 보험 정책의 유지 및 총괄

- (가) 매 분기별 서비스 제공현황 파악
- (나) 보험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험의 만족도조사 실시
- (다) 비주기적으로 서비스제공현장 방문 및 지원
- (라) 사업공모를 통해 협력할 민간보험업체 발탁

□ 존엄한 죽음을 위한 대안 및 대책 개발

- (가) 방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내용의 적극 반영
- (나) 각 서울시, 민간보험업체, 동 주민 센터, 자치구별 노인 복지관 대표를 구성으로 한 상반기와 하반기 회의 진행

□ 민간보험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

- (가) 서울시와 민간보험업체와의 직접 계약 체결을 통한 사회적 책임 공고화
- (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재계약 여부 논의
- (다) 진행현황 확인 및 공동안전검토 공동 진행

□ 보험 예산 지원 및 관리

- (가) 각 자치단체 및 기관별 필요한 예산 검토 후 지급
- (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 또는 제한

□ 독거노인 웰다잉 관련 사전교육 및 서비스 내용 개발

- (가) 전문가 회의를 통한 통일된 사전교육 및 서비스 내용 구축
- (나) 사전교육을 진행할 전문인 선발 및 파견 관리

III. 기대효과

- 가. 서울시 주도의 사회공헌문화 확산 및 서울시 내 복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통합적 사전 사후 관리 가능 및 독거노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 경감 및 긍정적 변화 도모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다. 독거노인 가운데 실질적 무연고자의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기여
- 라. 전문인 발굴과 장례절차 시 장례지도사, 유품정리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가능.

팀 명	임이랑 양이랑
제안명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애말기돌봄
제안요지	1. 노인요양시설 내 임종 법적 근거 마련 2. 시설 내 생애말기돌봄(터미널케어) 지원 3.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존엄한 죽음 및 애도문화 장려

제안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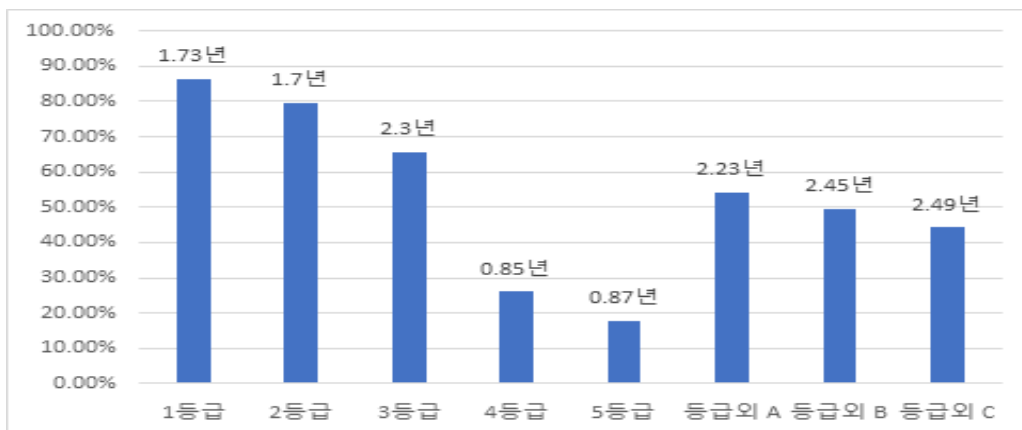
1. 정책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 존엄한 죽음과 임종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약칭 연명 의료결정법,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 해외 사례, 일본의 개호보험 터미널케어 수가 적용, 영국의 생애말기돌봄 전략 등 단계별 생애말기 전문완화적 돌봄 및 급성기병원의 임종비율 감소 추세

○ 노인요양시설 내 생애말기돌봄 요구 증가

-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 요구 및 장기요양 노인의 사망 증가
- ‘08.7.1.~’16.12.31.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1,451,212명 중 48.2% 사망(2016.12.31. 기준)
- 한 해 평균 1등급 20%, 2등급 17%, 3등급 이하는 10% 이하가 사망. 등급인정 후 1, 2등급은 2년 미만 동안 약 80%가 사망(한은정 외, 2017)
- 의료법상 의료법상 노인요양시설 내 임종 제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임종 징후가 나타날 때 의료적 처치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연명치료를 받다 사망



(그림 1) 장기요양 제도 진입 후 등급인정자 생존기간 및 사망률

○ 말기 치매 등 비암성 말기질환의 말기암과 다른 별도의 터미널케어 필요

- 말기 치매 등 노인성 정신질환의 경우 돌봄과 의료적 필요 동시에 급증
 - 현재 시설에서 촉탁이나 간호사들이 경관영양투브나 유치도뇨관 삽입 등의 간단한 의료적 처치만 할 수 있어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 가능(가정전문간호사, 보건진료원 허용범위)
 - 말기암 등 신체질환과 달리 의사소통 장애,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그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터미널케어 필요
- ⇒ 노인요양시설은 대부분이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자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중증 허약노인을 말기질환자로 인지하고, 임종까지 포함한 돌봄계획 필요

2. 정책의 내용

○ 노인요양시설 내 임종 법적 근거 마련

- 노인요양시설 내 터미널케어 및 임종 법적 근거 마련
- 터미널케어에 대한 별도의 지침 개발 및 위원회 준비
- 촉탁의에 의한 터미널케어 진단, 사망진단서 발급 등 역할 강화
- 노인요양시설 내 터미널케어 제도 시행 및 추가수가 가산

○ 노인요양시설 내 호스피스 지원

- 터미널케어기관 지정 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강화
- 터미널케어 관련 인식 교육 및 사후돌봄(종사자, 같은 방 어르신, 사별가족 등)
- 일정규모 이상 노인요양시설 의사 상주하거나 의료기관 연계 강화
- 노인요양시설 집중돌봄 간호사의 의료적 행위 허용(가정전문간호사, 보건진료원 참고)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통한 호스피스 지원

- 민간 호스피스활동가들을 연계하여 전문적 호스피스 활동 연계
- 호스피스 활동을 통한 지역주도의 커뮤니티 케어의 교두보 역할
- 지역의 종교단체, 호스피스단체, 봉사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기준 변경 및 애도문화 활성화

- 층별 호스피스실의 설치 및 인력 기준 강화(예, 호스피스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실)
- 현재 다인실 중심의 생활에서 점진적 1인실 비중 확대 및 지원
- 시설 입소부터 사후돌봄까지 전인적이고 총체적 돌봄과 호스피스 지원
- 종사자, 입소자 모두 함께 애도하고 삶을 잘 마무리하며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도문화 필요

⇒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임종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존엄한 죽음과 애도문화 활성화

3. 정책 기대효과

- ① 말기 및 임종과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마련
- ② 장기요양기관 생애말기돌봄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관리감독체계 마련
- ③ 터미널케어 적정수가와 서비스 보상체계 마련
- ④ 양질의 생애말기돌봄을 위한 제공인력의 질적 수준 확보
- ⑤ GSF 지침 이용으로 생애말기 임상지표 제시 및 지지적 돌봄 제공
- ⑥ 생애말기의 연기의 연명치료로 인한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재고 등
- ⑦ 분절적인 요양과 의료서비스의 연계
- ⑧ 예방 및 신체케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보완,
- ⑨ 예방부터 가족의 사후돌봄까지 전인적 노인돌봄 체계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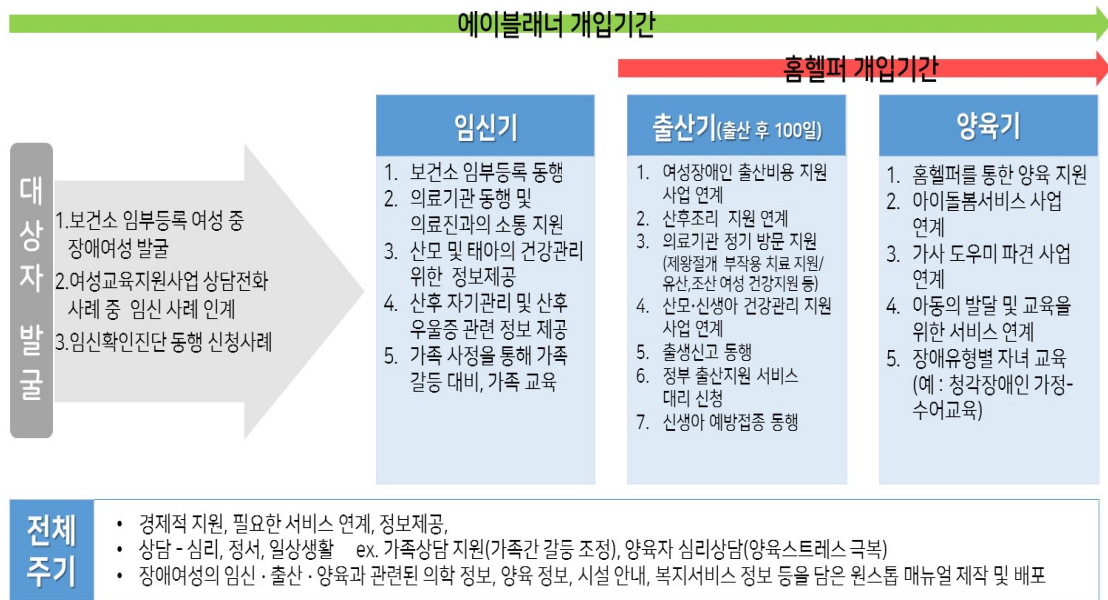
팀 명	중앙·서울·유
제안명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에이블 워드 서울(Able with Seoul)' 정책
제안요지	인간의 기본권인 '재생산권리'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기존의 홈헬퍼 정책을 보완하고, 임신시기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에이블 워드 서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요약	
<p>1. 재생산권과 장애여성</p> <p>재생산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강요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과정은 성관계, 성 정체성, 파트너십 등 섹슈얼리티 전반과 긴밀하게 연관되고, 양육에서도 실질적인 주도권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나영정, 2016).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은 '정상적인' 태아 출산의 책임과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에 의한 행위로 두지 않는 등의 형식으로 제한된다.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존재로 가치절하되고, 임신 및 출산, 양육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이 부정된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p> <p>2. 장애여성 재생산권 관련 정책</p> <p>현재 장애여성의 재생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비용지원, 장애여성 홈헬퍼(가사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여성 대상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홈헬퍼(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이 있고, 장애여성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출산 관련 상담과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임신 시기의 개입 부족, 대상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부재, 낮은 정보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p> <p>3. 정책 제안 - 에이블 워드 서울(Able with Seoul)</p> <p>장애여성의 임신 경험은 임신을 한 순간부터 출산, 그리고 그 이후의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 및 한국의 정책들은 지속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장애여성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영국 미</p>	

드와이프(mid-wife)를 벤치마킹한 ‘에이블래너(able + planner: 사업명인 동시에 사업 전담 사회복지사를 칭함)’사업과 서울시의 기존 ‘홈헬퍼’ 사업을 보완한 ‘에이블 위드 서울(Able with Seoul)’ 정책을 제안한다.

(1) 에이블래너(Able + planner) 사업 제안

‘에이블래너’ 사업은 장애여성이 임신한 시기부터 출산, 그 이후의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1:1 전담 사회복지사인 ‘에이블래너’를 배정하여 상담, 교육, 의료지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 장애여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욕구들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정책 “에이블 위드 서울(Able with Seoul) ”



(2) 홈헬퍼 사업 보완

홈헬퍼 사업은 서울시에서 장애여성의 양육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애모와 자녀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는 등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팀은 홈헬퍼 사업을 보완하고, 에이블래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 홈헬퍼 지원, 홈헬퍼 파견 시간 확대, 인력 확대 등의 보완 방법을 제시한다.

대상 확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3급 장애여성 → 1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1 ~ 6급 장애여성 - 서비스 대상자 수를 기존의 150여명에서 n명으로 확대
맞춤 홈헬퍼 지원	- 장애유형별로 전문화된 홈헬퍼 지원 -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가능자 양성, 파견 등

대상자 발굴	- 출산 가정을 방문하는 찾동 복지플래너를 통한 대상자 발굴 - 비장애인 대상 홍보 확대
홈헬퍼 파견 시간 확대	- 이용자의 장애유형, 개인적 욕구를 고려하여 홈헬퍼 파견 시간 확대
홈헬퍼-활동지원서비스 중복수혜 가능	- 장애여성이 홈헬퍼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및 수혜 가능하도록 함 -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생활권을 동시에 보호
장애여성 부재 시에도 양육서비스 제공	- 장애여성의 부재와 상관없이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여성의 외출권 및 생활권 보장
홈헬퍼 인력 확대	- 서울시 50 플러스 보람일자리를 활용한 인력 확대

4. 정책의 실행가능성

(1) 예산 확충 방안

본 팀이 제안한 ‘에이블 위드 서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확충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증액과 양성평등기금의 활용을 제안한다. 특히, ‘에이블래너’ 사업의 경우 추진기관인 서울시의 예산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기금의 활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서울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사업실적을 보면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중 제 27조(기금의 용도) 제 1호에 따르면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제 3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금운용이 가능하다고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본 팀은 양성평등기금 사업 내에서 주요 항목인 ‘가족기능강화’ 내의 세부사업내용으로 ‘장애여성지원’ 분야를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에이블래너’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인력 확충 방안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에이블래너’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시 전담부서에서 대상자 수를 고려한 사회복지사 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충한다. 홈헬퍼의 경우, 서울시 50+의 보람일자리를 활용하여 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50+세대에게 사회공헌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서울시 50+ 홈페이지). 서울시 50+ 캠퍼스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한 뒤에 현장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홈헬퍼 인력을 모집하고 홈헬퍼 교육을 이수한 뒤, 파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5. 정책의 기대효과

‘에이블 위드 서울’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및 모성권 확보이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킴으로 재생산권 보장과 모성권 확보에 기여하고, 이처럼 장애여성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출생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에이블 위드 서울’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함과 동시에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장애인의 고정관념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③ 공공일자리 확보이다. 에이블래너 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담부서의 사회복지사 모집, 홈헬퍼의 경우 50플러스 보람일자리 활용을 통한 인력 확충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공일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을 1:1로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의 선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본 팀이 제안하는 정책은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국내 최초로 정부단위에서 공적책무성을 갖고 1:1 전담으로 여성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비장애여성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일대일 서비스를 통해 장애여성을 넘어 다른 취약계층 여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발표 B그룹

1. 거리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
여성 노숙인의 가시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2. 배움품앗이
청년형 상명수단
3. 보평
개나리 학교 (재소자, 재소자 자녀가족 복지)
4. 이쁘둥이
엄마아빠와 아이가 행복한 행복 놀이터
5. 지역건강과 복지연구소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팀 명	거리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
제안명	여성 노숙인의 가시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안요지	우리의 정책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교육,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 여성용품 함 배치, 세 번째는 잠깐의 순간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리 여성 안전지킴이, 네 번째는 여성이기에 필요한 찾아가는 산부인과이다.
제안요약	
<p>가) 자신의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교육</p> <p>“자신의 성은 소중해요”이는 기본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집단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은 커녕 존재조차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노숙인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여성이라는 사회적, 신체적 약자로서 집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끔찍한 성 착취를 선택 혹은 강요당한다. 여성 노숙인 또한 여성이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스스로 아낄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성교육을 통해 이를 알려주려 한다. 성교육은 전체 여성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교육은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교육은 성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여성 노숙인의 성교육 참여를 위해 교육수당을 실시한다. 교육수당의 대표적인 예로 얼쇼리스의 클레멘트코스를 선례로 볼 수 있다. 교육 수당을 받기위해 코스 인문학 강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모두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했다. 교육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위의 선례처럼 교육이 여성 노숙인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저조한 참여율을 교육수당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성과 교육에 대한 동영상 공모전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연다. 완성된 동영상은 여성 노숙인 센터 등에서 상시 상영한다.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성교육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p> <p>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 여성용품 함 배치</p> <p>식품을 사기에도 바쁜 여성 노숙인에게 생리대는 사치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의 남성을 기본값으로 이루어진 노숙인 복지 정책은 여성만이 가진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간과한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은 여성이라는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여러 문제 중 건강 복지와 관련하여 생리와 임신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p>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영등포역에서는 서울예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한 민간차원의 생리대 나눔 복지가 실천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민간이 아닌 국가 복지 정책으로써 확대하려 한다. 사회의 일반여성들은 생리컵, 탐폰, 경구 피임약, 등 자신의 건강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 노숙인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여성들이 누리는 복지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일반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노숙인도 '선택권'을 가져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리대와 생리컵을 설치하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리대 사업은 여성 노숙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여성을 위해 실행된다. 여성 노숙인만을 대하는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는 노숙인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리컵은 여성 노숙인만을 위해 이루어진다. 서울시내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설치를 해놓아 여성 노숙인들의 사용을 높인다. 생리컵과 함께 세척 및 사용 방법을 기재한 설명서와 세척이 가능한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넣어둔다.

여성 노숙인 센터와 같은 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여성 노숙인에게는 첫 번째에서 주장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성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함에 생리대와 생리컵 뿐만 아니라 생리통 약과 피임약을 함께 지급한다.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이해를 한 대상들에게 비상약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여성 노숙인들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며 지하철역 화장실 내 여성 용품 함을 배치함으로써 여성 노숙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여성 노숙인의 복지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다) 잠깐의 순간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리 여성 안전지킴이

여성 노숙인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단 12곳뿐이며 이 중 9곳은 서울에 몰려 있어,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때문에 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여성 노숙인은 물리적 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이에 한 인터뷰에서 여성 노숙인은 지하철 방범대 근처에서만 노숙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지대가 됨을 바탕으로 우리는 '거리 여성 안전지킴이'를 통해 안전지대를 확장시키려한다.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사회복지사가 돌아다니며 거리 노숙인의 위기관리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시간만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그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며, 자율방범대 측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한 '여성 안전 지역' 사무실에서는 여성 노숙인과 복지사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장소 제공을 하며,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파악한다.

'거리 여성 안전지킴이'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들을 센터의 상담가 교육과 연계하여 양성한다. '거리 여성 안전지킴이'를 통해 여성 노숙인의

안전 지대를 확충 시켜 여성 노숙인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피해 등의 인권침해등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여성 인권보호 역할과 여성폭력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상담가 교육을 통해 여성 노숙인의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 여성 노숙인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여성이기에 필요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현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많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 정기검진 혹은 비상약 제공 등의 단순 치료에 국한되거나 서울시 노숙인들을 위한 단순한 진찰 등의 상황으로 열악하다. 현재 여성 노숙인은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현재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넘어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또한 항목에 포함시켜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 노숙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무료진료소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소량의 생리대 및 피임약 지급뿐이다. 따라서 무료 진료소와 같이 각 지역마다 산부인과에서 진행하는 여성 정기검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 노숙인이기 때문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제도는 현재 산부인과에서 6개월 혹은 1년에 1번씩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항목으로 제시하는 검사들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노숙인이 산부인과와 관련된 진료나 검진을 받고 싶을 때, 그 날짜에 맞추어 무료 진료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무료 진료소에서의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나 병원으로 연계해준다. 이 제도를 통하여 여성 노숙인 의료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여성 노숙인의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팀 명	배움품앗이
제안명	청년형 상병수당
제안요지	<p>■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상병수당제도가 현재 한국에는 없는 상황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p> <p>■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통해 청년의 건강권 보호,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질적 발전,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것이 기대됨.</p>
제안요약	
<p>1. 목적: 본 팀은 ‘청년대상 상병수당’을 제안하고자 한다.</p> <p>2. 서문</p> <p>1) OECD 국가 중 한국에만 없는 상병수당?</p> <p>상병수당제도는 현재 OECD 국가 중 스웨덴과 미국,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존재하는 제도다.</p> <p>2) 상병수당이란?</p> <p>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상병수당제도는 근무의 연관성과는 상관없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생기는 소득상실 분을 채워주는 정책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소득보장제도로써 빈곤 완화,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로써 평가되고 있다.</p> <p>이미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p> <p>3) 연구의 목적과 방향</p> <p>현재 상병수당제도의 시행을 앞두고서 이 연구는 ‘제한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제도를 제안하고, 이 제안의 적절성과 현실성 그리고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p> <p>4) 왜 청년이 대상인가?</p> <p>본 연구팀에서 복지정책의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이행기인 청년 시기에 빈곤과 건강 악화에 빠지면 평생 어려움에 처하게</p>	

될 것이라 판단했다. 둘째, 서울형 ‘유급평가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계층이 청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상병수당제도를 ‘서울형 유급평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연구결과를 냈다. 이렇게 도입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빠진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다. 셋째, 청년층이 최근 복지정책을 모바일, 온라인 환경 등으로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청년을 선정했다. 따라서 복지에산에 관한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을 청년으로 보았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문헌검토와 심층면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검토와 비정규직 대상 청년층 6명과의 심층면담과 학계 전문가 2명, 현장 활동가 2명의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문헌검토를 통해서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를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대상이 되는 청년층 6명과 심층면담 함으로써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전문가 심층면담은 제안 제도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됐다.

3. 연구의 결과

1) ‘신빈곤’ 위협에 빠진 청년

본 연구의 결과로서 현재 비정규직 청년들은 ‘신빈곤’에 따른 건강악화에 빠져 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이행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먹거리와 주거에서 불안한 환경에 처해있다. 건강을 관리할 만큼의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군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이행기의 장기화는 다시 ‘연령제한’이라는 관습으로 인해서 지속된다.

‘노동시장 진입 장기화 → 주거 및 먹거리 환경 불안 → 질병 → 다시 노동시장 진입 장기화’

2)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①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와 방법은 인터넷 환경에 능숙한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복지정책 수행기관인 주민센터를 통해서 청년대상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기관들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증빙서류는 보건증과 근로확인서를 활용할 것이다. 기관의 역할로서는 동주민센터를 중점적으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서울시의 주민센터는 ‘복지허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② 상병수당 기간 및 금액: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건강악화, 그리고 빈곤의

사슬을 끊는 데 일부 도움을 주고자 청년대상 상병수당을 본 연구팀에서 제안했다. 전문가와 청년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급여액은 최저임금액과 자신이 일한 기준, 질병발생기간을 감안하여서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수준을 제안했다.

ex) 최저임금 7400원이라 가정, 평균 주당 5시간 일한 사람이 10일을 결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 $7400 * 5 * 10 = 370,000$

3. 정책의 기대효과

1) 지방정부 복지 발전에 기여: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가지는 복지정책의 장점은 국가가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정책에 있어서 온라인과 모바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 상병수당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기여

상병수당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례가 필요할 것이다. 제한적으로나마 시도된 상병수당제도를 통해서 상병수당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3) 청년에 관한 건강권 증진

미래세대인 청년세대에게 시민으로서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다. 청년기에 빈곤과 건강의 악화 경험이 끼칠 악영향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건강과 빈곤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벗어나는 데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팀 명	보평
제안명	개나리 학교 (재소자, 재소자 자녀가족 복지)
제안요지	재소자와 출소자 자녀들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개나리학교’를 설립하고자한다. 정책 수혜 대상자는 출소자와 그 자녀들, 그리고 재소자 자녀들이다. 개나리 학교를 통해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제안요약	
<p>〈개나리 학교〉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기대, 달성, 깊은 정이다. 개나리 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고 가정, 한사람마다의 잠재력을 끌어내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복지국가 달성에 한걸음 다가가며 아이와 부모, 아이와 아이, 부모와 부모, 가정과 나라간의 깊은 정이 생길 것이다.</p> <p>○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재소자 부모들은 자신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양육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권위적이거나 방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손상시키게 되어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은 필수부가결한 사항이다. ● 경제 부모의 수용과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모두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취약한 환경에 처하게 한다. 특히 아버지의 수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자녀들의 생활에 포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가족관계 수형자 중 자녀가 있는 수형자는 66%였으며, 기혼자 중 54.9 퍼센트가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으며, 45%는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여성 수형자들과 기혼자들 중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도 불분명한 수형자들도 포함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수치의 가정이 해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기에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경험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학교 부적응

학령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수용은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Huynh-Hohnbaum과 동료들(2015)의 연구 분석결과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확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 비행행동

국내의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남자비행청소년의 8.1%, 여자비행청소년의 10.3%가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재소자 자녀의 9.1%는 비행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소년 범죄인구(10세 이상 19세미만)는 71,035명으로(법무연수원, 2017: 554), 이는 해당연령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만명당 1411.8명(100명당 1.41명), 소년 범죄율은 1.4%라 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자녀의 범죄율(3.1%)은 우리나라 전체 소년범죄율의 2.2배 정도 높은 셈이다.

- 정서, 심리 문제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자녀들의 21.6%는 심리·정서인 문제를 갖는다. 비난, 낙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총체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수용된 부모와 자녀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하여 수용자자녀들 스스로도 수용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 정책 문제

재소자 자녀들은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 ‘아무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1.9%, ‘한부모가정지원’ 5.3%, ‘긴급복지지원’ 4.5%으로 나타났다.

- 각 지역의 법무 보호 복지공단

재소자와 출소자 자녀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정서적인 교감 없이 ‘학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재소자와 출소자 자녀를 모두 포함하여 진행한다.

- 아동의 권리보장 : 기본권 보장

아동의 기본권인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용자 자녀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 안 된다(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나아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 각 회원국은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집행, 교도소, 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다른 국가들의 이행현황은 우리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의 방향은 수용 자녀의 최우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 정책 내용

수혜대상자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자녀들과 부모

〈자녀프로그램 내용〉

1. 아동보호사 확립을 통한 1:1 혹은 1:다수 아동관리
2. 아동들을 위한 심리, 정서지원 프로그램
3. 병역, 직업체험을 통한 애국심 증가, 목표 확립
4. 멘토링을 통한 학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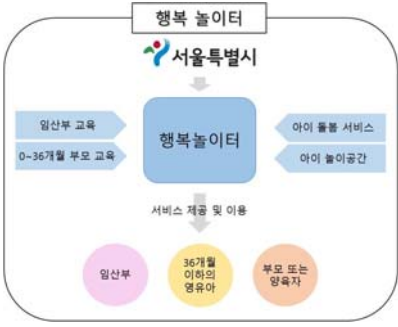
〈부모 프로그램 내용〉

1. 아동정서 및 양육 교육을 통한 1 : 1 맞춤 부모교육
2. 부모 자녀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교육
3. 심리치료

〈부모모임〉

1.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임
2. 정보, 심리/정서 공유
3. 문화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는 활동
4. 부모들의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아이들이 선택

심리·정서 안정, 대인관계기술, 사회적응기능이 향상, 애국심 강화시킨다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목표의식 확립을 통해 눈앞의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이다. 질적 발전을 이뤄내 사회 부적응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 가족 적응성, 가족 관계 만족도가 향상부모와 아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팀 명	이쁘둥이
제안명	엄마아빠와 아이가 행복한 행복 놀이터
제안요지	<p>행복 놀이터를 설립함으로써 첫째, 0~36개월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과 자녀 돌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보한다. 둘째, 임산부 대상으로 기초적·실질적 양육방법을 교육한다. 셋째, 영유아라면 누구든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이로써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나간다.</p>
제안요약	
<p>I. 필요성</p> <p>행복 놀이터 정책은 ①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진행, ② 생애주기별 교육, ③ 임산부 교육, ④ 통합화 및 정기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진행: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논문에 따르면, 주 양육자가 부모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듣고 싶지만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2위(30.6%)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생애주기별 교육: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 특성을 이해해야 함 임산부 교육: 기존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교, 아기의 뇌 발달 등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 중임. 하지만 아이를 처음 낳은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아이의 기저귀 가는 법, 우는 아이 달래는 법 등 기초적인 육아에서 발생함. 통합화 및 정기적인 교육: 여러 프로그램을 한 시설에 통합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수혜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p>II. 사업 모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상 :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양육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 운영 요일: 수 ~ 일요일(월, 화 휴무) 운영 시간: 09시~18시 교육 시간: 1일 1회 오전 진행 	

Ⅲ. 주요 사업

○ 행복 놀이터 설립

<p>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 교육 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기고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전문가의 돌봄이 이루어져 이용자는 안심할 수 있음 • 아이 10명 당 전문가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으로 구성하여 돌봄 주체와 대상 모두 안정된 보육환경 보장
<p>0~36개월 자녀를 둔 부모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법,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는 기술을 교육함 • 교육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교육, 퀴즈 시간, 익명 질문 시간 • 사전 신청제, 인원수는 10명으로 제한
<p>임산부 대상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실제로 필요한 기술 및 소통 기술 교육 • 초산부에게는 신생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육아 상식을 교육 • 양육 경험이 있는 임산부에게는 자녀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
<p>놀이 공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와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누구나 시설 이용 가능 • 수용 인원을 100명으로 함 • 부모교육을 이수하면 무료로 제공

Ⅳ. 홍보 방안

- 행복 놀이터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소책자 배부
- 행복 놀이터 SNS 운영

〈 행복 놀이터 포스터 예시 〉



〈 행복 놀이터 SNS 운영 예시 〉



V. 기대 효과

• 신체 및 촉감 놀이를 통한 발달

행복 놀이터는 신체활동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건강한 신체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 정서 및 인지발달 향상

• 또래 관계를 통한 사회화 및 발달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학습 및 연습, 자아 개념 발달, 사회적 안정감을 느낌

• 임산부 교육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임산부들이 출산 직후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함

•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증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짐

팀 명	지역건강과 복지연구소
제안명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제안요지	<p>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목표로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활동하는 청년들로 ‘터무늬있는 집’이라는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며 ‘건강의집’이라는 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일하는 축제,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기획 역량과 활동가로서의 경험을 통해 일상의 치유를 주제로 공동체를 다시 사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p>
제안요약	
<p>● 왜 지금 커뮤니티 케어 인가</p> <p>우리 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14%)에 진입했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 된다.(20%)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돌봄 문제의 보편화를 야기한다. 우리 사회는 돌봄을 일상적으로 필요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활성화는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져 잔여적으로 제공되었던 저급한 돌봄 모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 정책의 창이 열렸다.</p> <p>● 커뮤니티 케어란?</p> <p>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해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했다. 미국은 취약층도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시행한 개호보험제도를 2005년 개혁하며 예방중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됐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추진하는 다양한 시도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p>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 커뮤니티 케어가 안착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의료, 보건, 복지, 예방, 주거, 생활지원, 여가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두 번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림으로 그려지는 선진 모델이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지역 주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 혹은 동원 되거나 수혜자로 머물 것인가.

네 번째,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노인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할 것이냐 청년층, 청소년 층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문화 예술의 접목은 가능한가? 커뮤니티 케어 성공의 핵심은 재미, 즐거움이라고 본다. 재미와 즐거움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문화 예술적 접근이다. 가능한가?

●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로컬엔터테인먼트 모델” 모형

- 문화를 통한 공동체 치유

전문 예술인이 하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예술 지향

- 일상적인 치유 예방 환경의 조성의 중요성

사회적 지지와 연대, 고통 받는 사람들의 연대야 말로 억압적으로 구축된 아픈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 예방적 돌봄 시스템 구축, 탈의료화된 지역 기반의 공동체적 치유, 전문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일상적 장소와 일상적 관계성의 회복

-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축제, 공동체 활동 정리

마을축제(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등)

청소년 교육(지역아동센터, 고등학교 등)

청년 공유주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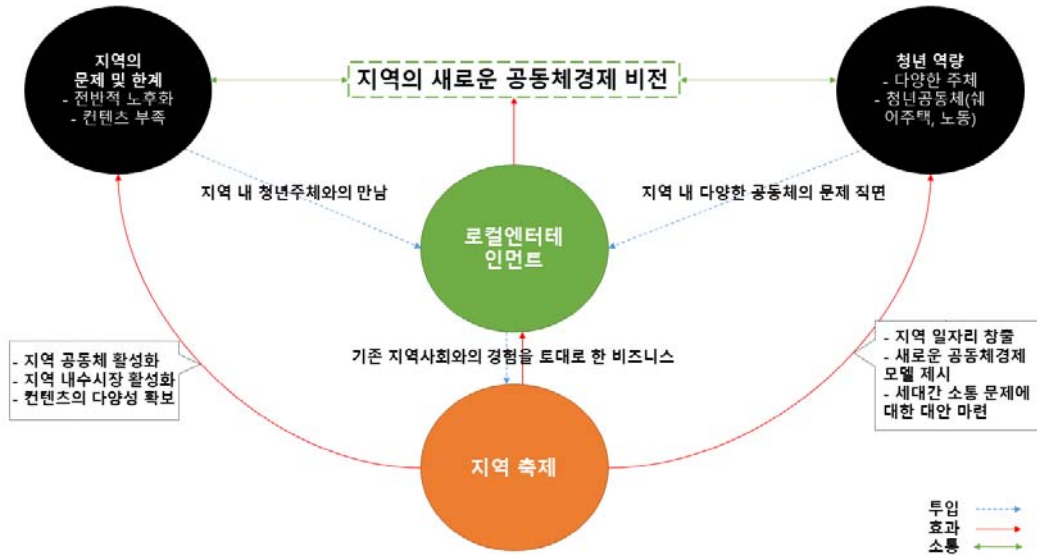
청년예술인 버스킹 (비긴어게인)

푸드 트럭 운영(지역 문화 축제 행사에 참가,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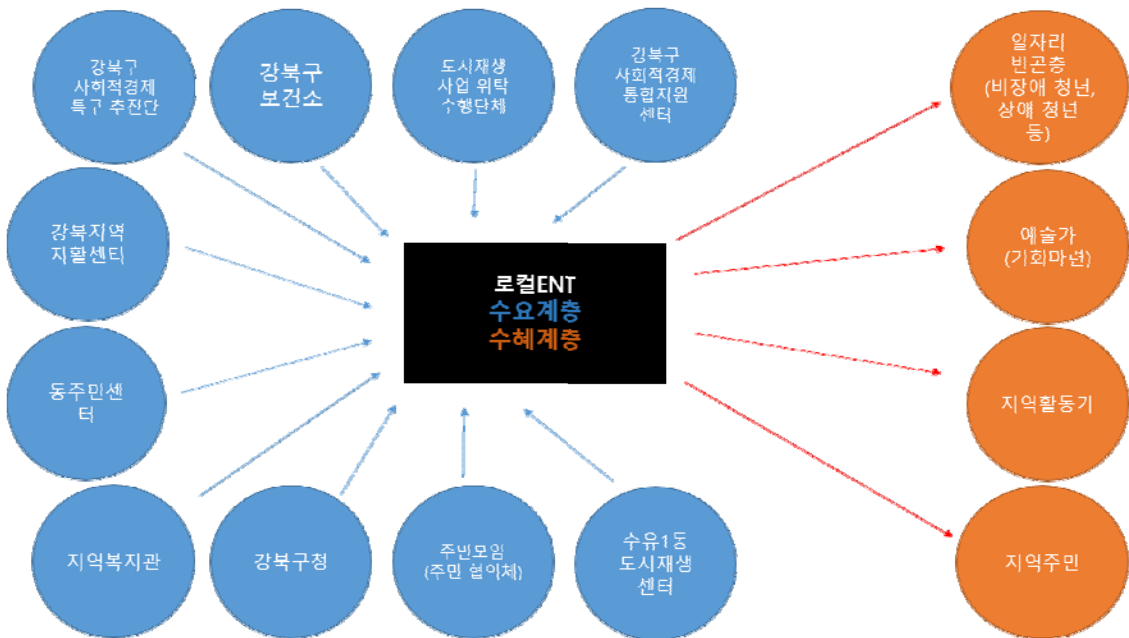
- 간략한 모형

사회복지(마을활동가/사회복지사) + 의료복지(왕진) + 문화복지(음악치료/축제)

= 공동체적 치유 공동체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로컬엔터테인먼트 모델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로컬엔터테인먼트 모델

발표 C그룹

1. 골목복지

청년 마음 다독이기 : 당신의 봄은 안녕하십니까?

2. 안고서

서울시 청·장년층 1인 가구 통합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제안

3. 작은참여, 큰 청년을 만들다

서울 청년참여소득

4. 조.명.희

슬기로운 알바생활
(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팀명	골목복지
제안명	청(靑)년 마음다독이기: “당신의 봄(春)은 안녕하십니까?”
제안요지	‘청년마음 다독이기’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정신건강보장을 연계한 정책번들(Policy Bundle) 프로그램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수당 연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주요개선 사항은 첫째, 청년수당대상자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선별에서 QR코드 자가심리진단을 활용하였다. 둘째,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리상담에 청년들이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고안하였다. 셋째, 기존의 유관기관과 온라인서비스 연결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제안요약

○ ‘청(靑)년 마음다독이기’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문제의 심각성

-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통계청, 2018),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이행기간은 평균 12개월 이상임. 이에 청년대상 기존 정책들은 청년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소득보장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임
-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전체 청년 중 2.8%만 진입하는 공시나 공무원을 선호하고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스트레스나 우울 등정작 본인의 정신건강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자살과 같은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20대의 가장 큰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구성비에서 44.8%임.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은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 비해 간과됨.

<표> 연령별 사망원인과 구성비

(단위 : 인구 10만 명당 명, %)

	0세	1-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7 (1위)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악성신 생물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악성신 생물	악성신 생물	악성신 생물	악성신 생물	악성신 생물
	139.8	1.9	4.7	16.4	24.5	42.5	126.7	305.5	744.9	1445.7
	(51.7%)	(17.0%)	(30.9%)	(44.8%)	(36.9%)	(28.9%)	(38.1%)	(44.1%)	(34.8%)	(17.3%)

출처: 통계청(2017) 사망원인통계

• 제안하는 정책의 기본 현황

기관 명	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	청년활동지원센터
현황	서울시 25개자치구에 설치	스트레스 관리 및 온라인상담	- 마음건강지원사업 - 관계망지원사업 - 활동경험지원사업

• 현행 정책의 한계 및 정책방향 제시

① 한계

- 심리상담소(마음톡톡)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부재**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함
- 현행 지역단위 서비스와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함(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
- 충분한 인프라와 노력에도 **청년들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고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은 대상자 선별과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재**에서 비롯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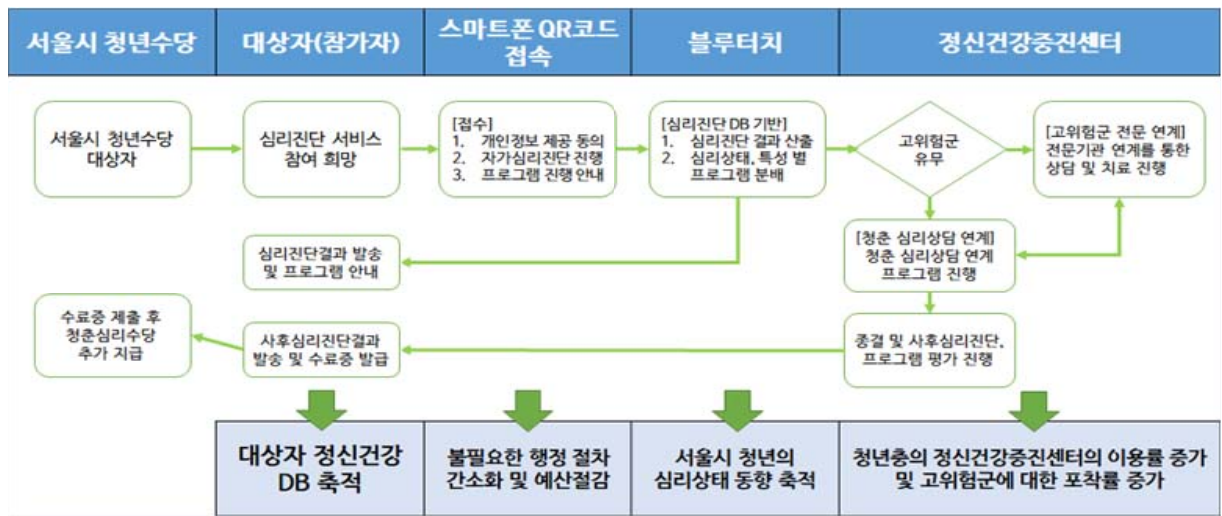
② 개선방향

- 청년수당을 연계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선별기준인 미취업 청년과 소득 수준 외에 **정신보건 전문 자가심리진단 척도**를 통해 위험군 대상자를 선별하여 **목표 효율성을 높임.**
- 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전문자가심리진단척도로 대상자 선별**
-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정신건강서비스를 묶는 **정책번들(bundle)제안**
- 기존의 정신건강 관련 체계 및 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 기존의 유관기관과 온라인 서비스연결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구축**

○ ‘청(靑)년 마음다독이기’ 정책제안 내용

- 정책 목표 : 서울시 청년들의 **정신건강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 대상 : 청년수당대상자+자가심리진단 판정결과에서 위험군
1)만 19세~29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2)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3)심리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국내외 사례 : 국내 - 전주시 ‘청년쉽포프로젝트’청년 구직수당과 청년심리프로그램 / 해외 - 호주의 ‘헤드스페이스’정책
- 청년 소득보장(수당지급) 및 청년 정신건강 심리치유서비스 지원
- 재원규모 및 조달방법
- 총 예산 : 1,835,500,000원 / 예상 정책 대상자: 7000명
- 협력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 블루터치(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청(靑)년마음 다독이기’ 정책실행 모형



- QR코드 방식을 이용한 자가심리진단 진행
- 블루터치를 이용한 심리진단결과 산출 및 유관기관을 통한 제공 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배분
- 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참가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태에 따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갈등 발생가능성
 - 청년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홀하게 여겨져 왔으며, 청년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정당성이 부여됨
- 고려사항
 - 프로그램 참여자의 거부감, 고 위험군의 신속한 전문서비스 연결, 조례
- 고려사항 해결방안 고찰
 - 정신보건 관련정책 및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 청년의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책 활성화

○ ‘청(靑)년 마음다독이기’ 정책의 기대효과

- 구직청년의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능력 향상
-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문제 완화, 특히 자살률 감소
- 서울시 민간, 공공기관 네트워크 체계 구축, 효율적인 예산 사용
- 청년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에 기여
-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

팀 명	안고서
제안명	서울시 청·장년층 1인 가구 통합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터 및 어플리케이션 제안
제안요지	청·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고독사 문제가 전 연령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정의 및 통계가 부재하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고독사와 연관이 높은 1인 가구의 욕구는 ‘건강(식생활 포함)’, ‘사회적 관계망’, ‘안전(안부 확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1인 가구의 욕구를 복합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고자 한다.
제안요약	
<p>1. 정책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p> <p>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는 ‘혼자 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사회통념상 ‘고독사(孤獨死)’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관련 통계도 부족한 실정으로 무연고사를 통해 고독사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2호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보았다.</p> <p>최초의 고독사 통계를 제시한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2014, 김명숙PD)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사례는 총 162건으로 이들에 한 건의 고독사가 발생한다. 의심사례까지 합산하였을 경우에는 총 2,343건으로 하루에 6.4건의 고독사가 발생한다. 또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통계 모두 50대(22.4%)와 남성(84.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이상 고독사를 노인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p> <p>우리는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 고독사 현상의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형태의 변화가 존재하며, 사회적 관계망 단절과 해결되지 않은 연령대별 1인 가구 욕구가 고독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및 고독사 예방 관련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청·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해 이들의 욕구인 ‘건강(식생활 포함)’, ‘사회적 관계망’, ‘안전(안부 확인)’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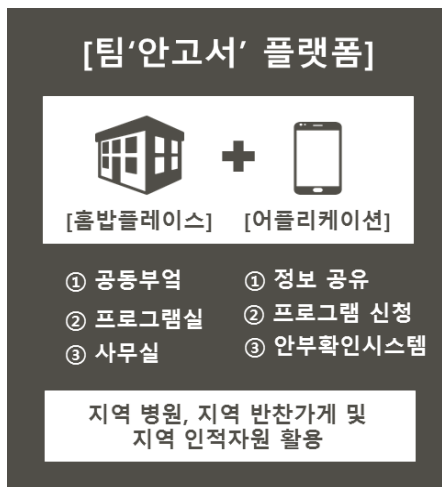
2. 정책의 내용

홈(Home)밥 플레이스는 '혼밥(혼자 밥을 먹다)하는 1인 가구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집 밥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다.

① 공동부엌은 평상시에 열린 공간으로, '함께 음식 만들기', '함께 홈(Home)밥', '요리교실' 등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요리교실은 반찬가게 운영자 혹은 주부 등 지역 인적자원을 통해 건강한 음식 조리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② 프로그램실은 대여가 가능한 공간이며, '1인 가구 인식 개선 강의', '1인 가구 건강 케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인 가구 인식 개선 강의'는 '도움요청 방법', '고독사의 위험요인 인식과 예방책' 등 강의와 함께 영화관람 등 사회적 관계 맺고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 촉진 프로그램이다. '1인 가구 건강 케어'는 지역 병원 제휴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과 운동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우리지역 반찬가게'는 지역 반찬가게 제휴를 통해 일정 지원금으로 회원인 1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반찬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③ 사무실은 '홈(Home)밥 플레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곳으로 기존 정책의 부족함을 채워 1인 가구 및 고독사에 대한 관리를 하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한다.



팀'안고서' 플랫폼



'홈밥 플레이스' 내부 설계도

'홈(Home)밥 플레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홈(Home)밥 플레이스' 및 해당 지자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 고유의 QR코드인 온라인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이는 방문 및 프로그램 이용 및 반찬가게 할인 인증 용도로 사용된다.

'안부확인시스템'은 '회원가입 시에 이용을 동의한 경우', '고독사 위험군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열람을 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하여 작동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비교하여 마지막 사용시간 후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열람한 기록이 없을 경우, ‘홈(Home)밥 플레이스’ 사무실에서 1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급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한다.

회원가입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가구형태

주소

연락처1

연락처2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수)

안부확인서비스 동의 (선택)

회원가입 화면

알림 게시판

프로그램 신청

내 정보(회원코드)

메인 화면

3. 정책 기대효과

고독사의 전제 대상이 되는 1인 가구를 위한 ‘홈(Home)밥 플레이스’는 계속해 급증하는 1인 가구와 ‘통계 없는 죽음’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독사를 감소시킬 것이다. 먼저 공동부엌 및 반찬가게 프로그램은 주거 환경과 금전적 문제로 ‘인스턴트로 한 끼를 때우는’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조리 장소를 제공하고, 보다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건강한 섭취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1인 가구와 지역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될 것이다.

‘1인 가구 인식 개선 강의’는 본인의 삶과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것이며, 지역주민이 조금 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인 가구 건강 케어’는 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건강 커뮤니티를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1인 가구 관리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행정 및 실무 효율을 높여줄 것이다. 특히 기존 정책에 비해 짧은 안부 확인 기간으로, 보다 더 빠르게 위급 상황을 예방하고 고독사 발생에 대한 신속한 사후 발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핸드폰 사용 패턴과 사용 여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체계적인 1인 가구 사용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다.

팀 명	작은참여, 큰 청년을 만들다
제안명	서울 청년참여소득
제안요지	<p>30만원이 넘는 학원비,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족한 생활비 그리고 막막한 취업,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 큰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 씩 지급해준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수당이 좀 더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접목시켰다.</p> <p>청년들은 관심분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행위자가 되어 주체성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여 발표회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영역을 넓히며 사회혁신적 인재로 성장 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p>
제안요약	
<p>사회는 높아지는 청년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6년 성남시는 청년 배당을,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 등장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참여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나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청년수당이 ‘취업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수당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 씩 지급해준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수당이 좀 더 취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접목시켰다.</p> <p>지역사회는 취업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사회학습의 장으로써 청년에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접하는 새로운 사회영역은 관심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다.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터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고, 도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원동력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 공헌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해당 정책의 목적이다.</p> <p>더불어 청년은 다양한 참여 분야의 협력체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청년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p>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회로 얻게 될 다양한 경험은 청년들 스스로 조직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다는 경험으로써 성취감을 줄 것이며 나아가, 성취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인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사회가치는 청년 개인에게는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을 통하여 얻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전반에서는 발전한 인재이자 적극적 인재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혁신인재에게 깎이어 완화와 참여소득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한다.

두 번째로 **관료주의적 복지체제로 인하여 망가진 사회서비스의 회복**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이 매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예산 대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영국의 사회혁신가인 Hilary Cottam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유대관계에 주목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관료주의적인 복지체계 안에서는 다수의 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서비스 연결망 내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자 수혜자가 원하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다는 것이다. **관계는 그 자체로 자원이자 현대의 개인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임**을 의미하는 사례이다. 때문에 청년이 청년참여소득 정책의 사회참여활동으로 마주칠 다양한 관계자와 그 연결망은 청년은 물론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더 나아가 기업들 간의 연결다리가 되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정책의 **진행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청년의 자율성과 주체성, 그리고 사회참여**이다. 청년은 서울시가 임의로 선정한 복지 이슈 3가지 또는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지는 동시에 이슈 내 소주제와 관련된 활동들 토의를 통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집단 교육과 활동 일지, 간단회의록 등 양식에 대한 안내를 고지받고 팀 또는 개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추후 활동 진행에 있어서 무리가 있을 시 지역구별 단위로 범위 및 조직을 제한할 수 있다. 활동은 주1회 2시간의 토의활동, 8시간 이상의 활동을 장려한다. 모든 참여자가 활동 일지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팀의 경우 토의활동 시 회의록을 한 명이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모두 참가자의 연말 컨퍼런스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의 권고이다.

개인 참여자는 청년주도 프로그램과 같이 사전에 서울시를 통해 연결된 기업 또는 기관 또는 개별 지역사회조사 주제를 정하고 기획한다. 피드백 방식도 동일하다. 이로써 단순히 수당을 주는 것에 그쳤던 청년수당에서, 청년이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을 주는 '청년참여소득'으로의 대체를 기대한다.

해당 정책은 4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속감 부여와 주체성의 회복이다. 참여자는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속감은 장기 미취업 등으로 생기는 무기력감, 사회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다. 참여소득과 함께 정책 활동의 참여자라는 소속감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심을 심어주어 사회의 요구에 대해 준비하기만 바빴던 청년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참여자의 색다른 의식 함양 및 취·창업으로의 길이다. 참여자는 평소 애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없던 관심 분야가 생기는 등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있을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고민의 결과를 사회구성원에게 보여줌으로써, 참여자 개인에게는 발전의 기회이자 사회구성원(기업인사 등)에게는 인재발굴의 장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증진이다. 청년은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경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년의 시선에서 지자체, 기업, 학계 등이 주목하고 있던 사회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그 결과물이 축적됨에 따라 청년 복지정책과 사회문제의 해결이 상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참여소득을 통한 경제적 부담 및 사회의 부정적 시선 완화이다. 기존의 청년 복지정책 중 일부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반면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 이용자의 심리적 불편이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받는 참여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입에 대한 노력을 사회구성원에게 알리는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 본인이 수동적인 수혜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청년이 능동적인 수혜자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사회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팀 명	조·명·회
제안명	슬기로운 알바생활 (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제안요 지	배달대행업 청년알바는 4차산업혁명 기술변화로 생긴 플랫폼노동자이다. 배달대행업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달대행업 청년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산재보험의 밖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으로 사회적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안요약

○ 정책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 본 정책제안은 인지자본주의로의 성격변화와 함께 부상한 배달대행업 청년노동자의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문제(사용종속관계의 해체와 사회보장비용의 회피)와 관련하여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청년알바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함.
- 왜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노력을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이유는,
 - 1) 서울시는 배달에 자체 알바를 활용하는 기존의 배달방식보다 최근에 새롭게 부상한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하여 배달을 위탁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음. 따라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응보다 **한발 앞선 대응이 필요함.**
 - 2) **현 제도의 공백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산재보험료만 지원하지 않아 명백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있음.** 특히 특고노동자(배달앱노동자)는 노동의 성격상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속성의 문제로 제외되어 있는 집단임.

- 배달앱 청년알바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

첫째, 배달노동은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영역이고 청년(20대)가 다칠 경우 휴우증이 평생가기 때문에 치료가 절실함. 또한 노동주기로 봤을때 청년이 다치게 되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임.

둘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 알바 가운데 배달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이 짧고 업무숙련도는 낮아 사고위험률이 매우 높음. 지난 1년간 45.6%가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경험함(한국노동연구원, 2016).

셋째, 현재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산재보험 가입율은 32.0%(한국노동연구원, 2016)로 배달앱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이므로 가입기피 또는 정보가 부족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서울시의 '배달대행업 청년알바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제안 내용

① 사업명 : “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② 정책목표 :

- 배달대행업 청년들의 안전 확보

③ 지원대상 :

-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재보험에 대한 자부담(50%, 100%)이 있는 청년
- 지원대상의 범위: 노동시장의 변화로 배달앱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50%(사업주 50%, 근로자 50%), 100%(근로자 100%)를 부담해야하는 특수고용형태(전속, 비전속) 배달앱 노동자
(※ 기존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체 배달알바는 당연적용으로 사업주가 부담함으로 제외)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 노동자

<표1> 지원대상의 근거

구분		일반 음식점소속	배달대행업 소속		
근로형태		근로자	근로자 및 특수 고용형태 혼재		
직종 분류	대분류	기타 각종사업	운수업		
	중분류	숙박 및 음식업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퀵서비스업		
	소분류	음식점 및주점업	퀵서비스업		
산재보험 적용		당연적용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당연적용	전속	비전속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 (당연적용)	중소기업 사업주특례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와 본인 1/2	본인

출처:근로복지공단 『배달종사자 산재적용 관련 추진계획(2017)』

④ 지원근거 : 서울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

- 중앙정부 주체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은 개별법 근거

⑤ 소요예산 : 연간 70억원

- 산출기초 : 10,036명 * 57,600원 * 12개월 = 연간 6,936,883,200원
- * 배달앱월평균 수입 180만원*3.2% 적용(산재보험 식품위생업종 3.2% 적용)
- 근로자 100%를 부담 산재보험료 월 57,600원
- * 서울지역 배달 대행원 수 추정 10,036명(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 * 50%당연적용 지원대상자가 많을시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수 있음
- 사업예산 산출근거: 2018년 상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일자리 업종별 현황
(공고 수 등 ※ 후술될 정책제안 본문 참고)

⑥ 집행방법 : 개인이 선납입후, 지원금 청구요청

- 배달대행업체 소속 청년 알바 가운데 평균 시급이 낮은 구로구, 강북구, 중랑구 등 3구 시범추진/시범 기간 후 적정 지원자 조정

⑦ 선발기준 :

- 신청자 소득 분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⑧ 국내외 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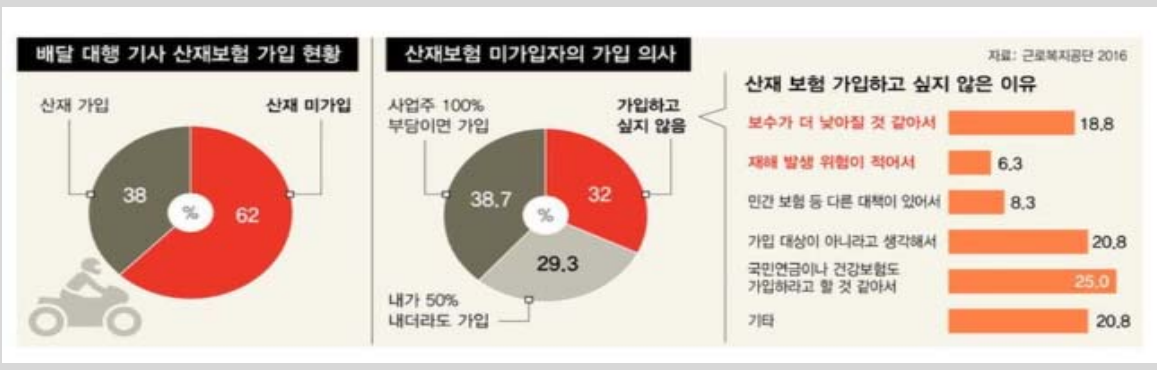
※ 프랑스의 엘코트리법: 2016년 노동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을 도입함.

- ▲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 플랫폼이 부합료를 부담할 것
- ▲ 플랫폼 노동자에게 직업 훈련을 보장할 것
- ▲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쟁의권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 .

⑩ 외국사례를 통한 사업내용의 보완 및 검토사항

-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입법추진
-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산재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배달앱노동자의 산재 및 노동 관련 노무상담 및 안전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상담소” 운영
- 서울시는 노무상담 및 교육 플랫폼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앱노동자의 근로실태: 플랫폼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전세계적인 숙제임.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따라 앱시장의 경제적 호황에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한 희생이 따름



○ ‘배달대행업 청년알바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 청년노동력을 보호함으로써 인해 사회적 재생산을 확보
-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한 청년의 심리적, 경제적 자립에 기여
- 지자체에 경제적 편익 효과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회

발표 D그룹

1. ARMADA

사회혁신 채권 도입을 통한 폐지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2. 위드유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경제 자립 정책패키지 “새봄로드”

3. 좋아요

서울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마스터플랜

4. 청년20+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크리에이터 ‘통 큰 플러스’



팀 명	ARMADA
제안명	사회혁신채권(SIB) 도입을 통한 폐지 산업의 선순환 구축
제안요지	사회혁신채권을 활용해 초기 자본금 조달 후, 각 동사무소에 폐지 자판기를 설치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정 수입을 보장한다. 이후 재생용지를 제작해 서울시 산하 기관에 판매, 이익 분배 후 남은 수익금을 다른 복지 산업에 투자해 복지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제안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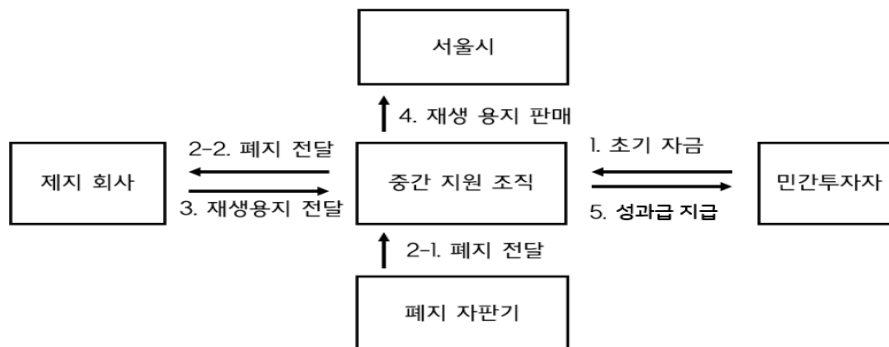
<정책 필요성>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 실태에 비해 한정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인 생계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팀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빈곤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폐지수집 노인의 빈곤에 주목하여 노인 생계비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폐지 수집 노인의 빈곤 실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지 가격’이다. 폐지 가격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의 폐지수집은 ‘비제도권’의 영역에 해당하기에 적절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여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한다.

<정책 내용>

본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는 폐지를 수집함으로써 생계를 해결하는 노인으로, 폐지로 인한 수입이 총 수입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이다. 간접적 수혜자는 본 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한 추가 복지 예산의 수혜자로 서울시 노인 인구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도입해 초기 자금을 생성한다. 사회혁신채권이란 사회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특정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보증하는 투자 상품을 의미한다. 즉, 사회혁신채권은 사업 수행성과에 따른 수익률이 달라지는 ‘조건부 성공지불채권’이다.

- 이해 당사자

가)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예산 집행과 직간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나) 민간 투자자: 사회적 목표 달성과 동시에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집단으로 이 집단의 투자금이 본 사업의 초기 자본금이 된다.

다) 중간 지원 조직: 서울시 산하 기관을 설치하여 사회혁신채권의 운영을 맡고 자본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라) 제지 회사 (수행 기관): 수행하는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자본금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률 또한 도모하게 된다.

마) 수혜자: 사업의 최종적인 혜택을 받는 객체로 수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따라 채권의 성공률과 수익률이 달라진다.

- 본 사회혁신채권의 성과 지표

폐지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노인들의 수입의 상승률을 성과 지표로 삼는다. 이때, 물가 상승률, 최저 생계비등을 고려해 정확한 수치를 정하도록 한다.

2-1. 초기 자금으로 동사무소를 거점지로 하여 폐지 자판기를 설치한다. 폐지 자판기는 폐지를 올리면 해당하는 무게만큼을 돈으로 반환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고물상과 같은 중간 단계를 생략한 구조(폐지 노인의 폐지 수거 -> 폐지 자판기 -> 제지 회사)를 형성하여 폐지 매입 가격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폐지 가격을 정찰제로 운영해 노인들에게 고정적 수입을 보장해줄 수 있다.

2-2. 폐지 자판기를 통해 수거한 폐지를 재생용지를 생산중인 기업에게 맡겨 재생용지를 생산한다.

3. 만들어진 재생 용지를 중간 관리 조직에 전달한다.

4. 중간 관리 조직은 재생 용지를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 준공공기관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복지 정책은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의해 복합적으로 평가되는데, 본 정책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상쇄하는 사회적 성과(노인들의 고정적 수입 제공, 자존감 회복 등)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5. 재생 용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남은 수익은 노인 복지 정책에 사용해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노인 참여 포럼을 통해 수혜자들의 실질적 복지 수효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1. 폐지 매입가격을 고정하여 폐지수집노인의 안정적인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폐지 분류 과정에서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 노인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 더불어 노인들을 공익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3. 복지 예산의 추가적 확보가 기대된다. 본 정책은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또 다른 노인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서울시는 자동으로 사업 이윤의 일부를 추가 복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 환경 문제 개선이 기대된다. 폐지로 종이를 만들면 종이생산과 관련된 대기오염을 95%가까이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도 평균 40% 절약된다. 따라서 본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에 재생용지를 공급하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새로운 환경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빈곤 노인의 생계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을 인지하는바, 사회 보장제도의 개선과 동반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울시 자생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본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노인인구 생활 지원 전반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환경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팀 명	위드 유
제안명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경제 자립 정책패키지: “새봄로드”
제안요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장기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여성 쉼터 거주자 및 퇴소자를 중심으로 수당지원(6개월), 주거지원, 맞춤형자산관리(12개월), 자산형성지원(24개월), 취업지원 총 2년간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제안요약

I. 서론: 정책의 필요성

- 서울시 특화 사업인 자산형성, 금융복지, 주거복지 사업 네트워크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인 포용적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고자 함.
- 서울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상담, 법률,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지원에 머물러 있고 장기적 관점이 부족함.
-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폭력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됨.
- 폭력 피해자는 치유를 넘어서, 계속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치유 이후의 삶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함.
- 자립 준비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립 지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폭력피해여성은 특히 다양하고 복잡한 자립 욕구와 과정을 가짐.

II. 정책 내용



1단계 : 수당지원

○ 쉼터 입소자 전원에게 6개월 간 인당 30만원(동반 자녀 1인 50만원, 2인 이상 70만원)을 지원

■ **문제:** 현재 쉼터에서 주거와 식사가 제공되지만, 생활비가 없어 바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간 일자리를 구직해야 하며 심리치료, 직업탐색에 집중하기 어려움

○ 쉼터 거주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심리치료 및 진로 탐색,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장기간의 자립 설계)

○ 입소 1개월 후부터 2-4단계에 원하는 시기에 참여 시작할 수 있음

○ 3-4단계에서 활용되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 '함께통장'을 통해서 수당을 제공

2단계: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신청자격 완화: 기간제한을 없애거나 5년 이내로 연장

■ **문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나 보호시설 혹은 주거지원시설에 거주한 피해자가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짐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없고 주거안정성 저해)

○ 피해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주거지원모델 확충: 폭력 피해로 인한 경제성질환 여부, 가해자의 위험도 차이, 근로능력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그룹홈, 단독거주 임대주거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거지원모델을 개발해야 함.

○ 임대주택 입주부담금 70만 원 지원

■ **문제:** 입주 부담금은 퇴거 시 반환되지만 입주 시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

○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거점 기관의 주소를 이용한 4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에 따른 다양한 제약 해소

■ **문제:** 쉼터입소자는 노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생활(휴대전화 사용 제한, 주소기입 불가로 인한 4대보험 가입 제한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위축된 생활)

쉼터의 폭력 재발방지 및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과 충돌, 자립의 방해요소임.

3단계: 자산관리 지원

○ 금융교육프로그램(Financial Education Program: FLE): 서울시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직원 중 가정폭력 이해/예방 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을 통해 제공.

○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1) 경제적 확대 이해하기 2) 금융 기본지식 익히기 3) 신용 관리하기 4) 경제적 기반 형성하기 5) 예산 관리 전략 만들기 총 5단계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특화한 커리큘럼으로 진행.

○ 개별 경제관리계획(Economic Action Plan) 설정 및 재무설계사 매칭

○ 자산형성지원사업 <함께통장> 참여 전제: 1:1 매칭펀드 지원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혹은 취업을 한 이후 인당 최소 10만원-최대 30만원을 2년 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음)

○ 재무설계사를 중심으로 개별 경제관리계획 EAP를 수립하여 이혼, 한부모 여부,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경력단절 여부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에게 맞춤형 경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

4단계: 취업지원

○ 피해여성의 장기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적 단계: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에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음.

■ 문제: 현재 컴퓨터의 정보유출의 위험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취업 및 취업준비가 어려움.

○ 서울시 내 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이용 활성화

○ 센터에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을 구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직업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1인 기준 최대 90만원(월30만원, 최대3개월)의 지원금도 함께 받아 대상자들이 추가로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정보유출위험 방지: 현재 사용하는 사회복지전담번호로 구직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III. 기대효과

○ 단기간의 자립 지원에 머물러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장기간의 자립을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기존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 / 주거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자립 및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함.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스스로와 가족구성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팀 명	종아요
제안명	서울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마스터플랜
제안요지	<p>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확대되고, 많은 일자리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 형태와 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 지원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자 한다.</p>
제안요약	
<p>정책 제안 배경: 플랫폼 경제의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경제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대표적 플랫폼으로는 Airbnb(숙박), Uber(운수), 배달의 민족(배달), 크몽·오투잡(각종 서비스) 등이 있음 •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경제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어디에도 고용되지 않은 개인 단위로 일하며, 노동과 휴식 시간의 구별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결합하여 향후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로 일할 것으로 예상됨 •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놓임 - 특히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에 비해 초단기간, 아주 작은 과업(task) 단위로 이루어짐 -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과 비교하여 하기의 문제를 가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고용자·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움 ②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함 ③ 노동자 개별화로 인한 노동자집단의 조직이 어려움 ④ 과업 중심의 노동상품화와 경쟁심화로 인해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됨 	

정책 제안: 서울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마스터플랜

1) 정책 1: 플랫폼 활용 기술 교육

-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일자리의 장(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사업에 플랫폼 활용 기술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이는 특히 중장년·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유익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법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

2) 정책 2: '플랫폼 노동자 조합' 설립 지원 및 육성

-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나, 플랫폼 노동자는 개별화되어 조직화가 매우 어려움
- 이에 '플랫폼 노동자조합'의 결성·운영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3) 정책 3: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플랫폼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보다 노동자에 가까우나 고용주가 불분명하여 피고용자 및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 중 사회보험료 100%를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음
- 이에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함

4) 정책 4: 서울시 공영 플랫폼 설립

-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안은 플랫폼 생태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임
- 이에 공영 플랫폼을 설립하는 정책을 제안함
- 그 방안으로는 ①서울시에서 직접 플랫폼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직영' 안과 ②기존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는 '협영'안이 가능함

정책의 기대효과: 새로운 노동에 대한 '노동존중 특별시'의 선도적 대응

- 1) 구직자(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일자리 접근성 향상
- 2)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강화
- 3)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
- 4) 플랫폼 노동자 간 교류로 경제적 가치 창출

5050



노동자 지원

	교육	조합 지원	사회보험 지원
WHAT	플랫폼 활용기술·권리 교육	플랫폼 노동자 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TO WHOM	플랫폼 노동희망자 (특히 정보취약계층)	플랫폼 노동자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
HOW	일자리 교육프로그램에 포함	플랫폼 노동자의 자발적 가입	저임금 플랫폼 노동자의 신청
WITH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노동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조합지원센터 SULLA COOP SUPPORT CENTER	노동조합 서울노동조합지원센터 서울노동조합지원센터 SULLA COOP SUPPORT CENTER

생태계 구축 (플랫폼 공공성 강화)

1안(자체 설립)	2안(기존 기업 협력)
공영 플랫폼 설립	기존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
플랫폼 노동자	
서울시 자체적으로 플랫폼 설립 및 운영	기존 플랫폼 기업과 협력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협업

민간

기존 플랫폼 기업

팀명	청년20+
제안명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크리에이터 '통 큰 플러스'
제안요지	5G의 상용화, ICT기술의 생활화에 맞춘 새로운 복지형태로 복지 재정건정성 확보,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이루고 서울시의 맞춤형·사회통합형·사회투자형 복지방향에 적합한 장년세대 중심의 선도적인 복지정책 제안
제안요약	
<p>I. 정책제안의 배경 및 목적</p> <p>1. 정책제안의 배경</p> <p>인구통계학적 상황, 장년층 세대의 사회적 관심 고조, 장년층의 특성 및 욕구, 미충족 욕구와 기존사업 사이의 불일치,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장년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연령에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복지 형태로,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크리에이터 '통 큰 플러스'를 제안하고자 한다.</p> <p>2. 정책제안의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령화로 인한 장년층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개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50+사업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 구축 2) 복지예산 증가에 비해 줄어드는 지방정부 자체 복지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여 보다 질 높은 복지를 실현하도록 인프라를 형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체복지예산에서 탄력적 운용 가능한 프로젝트, 1년 단위 사업 ② 장기적인 대상자 수요 증가와 세대별 욕구 변화 감지 3) 청년과 장년층 복지의 통합화, 폭넓은 스펙트럼 구축을 통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장기성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장년층 니즈 충족을 위한 5G의 상용화, ICT기술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② 세대 간 교류 공간확대를 통한 갈등 해소 및 이해 도모 <p>II. 장년층 지원 정책 현황 및 평가</p> <p>2012년부터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 계획,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장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욕구를 기반에 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p>	

있지만 여전히 사회참여활동을 비롯한 몇몇 부분에서는 미충족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부족과 제한성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 선도적인 복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서울시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Ⅲ.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크리에이터 '통 큰 플러스'

1. 사업 소개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크리에이터, '통 큰 플러스'는 청·장년의 통합 복지 사업과 I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유튜브, SNS 등 가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청·장년층을 위한, 청·장년층에 의한 영상 제작 및 아이디어 회의 등을 시행함으로써 당사자 주도의 대상자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참여형 활동 프로젝트다.

- (1) 청·장년 : 청년의 열정과 창의력, 장년의 경험과 기술
- (2) 맞춤형 : 당사자 주도의 사회참여형 활동 프로젝트
- (3) 통합형 :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사회 공동체 강화
- (4) 크리에이터 : 자기욕구에 맞춘 활동을 능동적·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 (5) 새로운 복지형태 : ICT 산업을 결합한 크리에이터 양성

2. 추진 대상

서울시 50+ 사업에 참여 중인 50 ~ 64세 장년층 & 20 ~ 34세 청년 중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있는 자

3. 사업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워크샵 및 크리에이터 교육1	[세대 공감 프로젝트] - 콘텐츠 개발의 이해 - 콘텐츠 아이디어 경진대회	콘텐츠 개발 및 제작 1~6	[컨텐츠(1~6) 제작] - 주제 선정 및 영상 기획 - 중간 점검
크리에이터 교육2	[컨텐츠 제작의 이해] - 촬영과 편집의 기초 이해 - 영상 스트리밍 기술 이해		- 영상 촬영 및 영상 편집 - 유튜브 업로드
크리에이터 교육 3	[ICT의 이해] - 실생활 ICT 활용 기술 - 미래 ICT 기술 교육	해단식	[상영회] - 상영회 및 수료증 배부

(1)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ICT 산업을 매개로 당사자 주도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ICT산업에 대한 교육과 자신의 욕구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유튜브 스트리밍 시스템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2)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크루를 형성하여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욕구충족을 위한 활동부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교육·환경 등의 영역에서의 적극적 사회참여·사회공헌 콘텐츠 개발 및 제작까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업의 시장성 및 차별성

2018년 통계분석 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지난 6월 이용자 2500만 명 중 50대 이상 이용자가 30%에 달했다. 그러나 수 백만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중 청년과 장년이 함께 운영하는 콘텐츠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통 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는 당사자들이 기획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인 콘텐츠의 영역을 확보하여 SNS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시민소통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시민참여적, 당사자 주체적 운영 사업방식으로 이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킴으로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고, 서울시50+ 사업의 홍보효과와 재단의 가치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IV. 정책 기대효과

첫째, 최초의 청·장년 통합형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통 큰 플러스’는 사회통합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SNS통합형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며, 전 세대에 ‘영상’이라는 결과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복지정책 및 사업과 차별성과 경쟁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통 큰 플러스’는 가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청·장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니즈를 충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상자 중심의 “선도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에 적합한 복지사업이 될 것이다.

둘째, 청년과 장년을 연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단절되었던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세대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사회 변화로 나타나는 세대균열 예방하고 격차를 경감시킬 것을 전망된다.

셋째, 가상의 공간을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는 ‘통 큰 플러스’는 영상의 주제와 댓글 등을 통해 청·장년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창이다.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하며, 서울시는 청·장년복지 사이의 소통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로 만들어 총체적인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욕구와 장년의 욕구의 교차점을 찾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대 청년에게 ‘50+’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상자 즉,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회

발표 E그룹

1. 노생노사

노노시장(老老市場) 조성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

2. 리베로

2030 청년 여성 맞춤형 팀스포츠 지원정책
“자유로운 몸을 향한 도움닫기”

3. 복지실미도

장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중잘기잘

한 끼를 부탁해(아동·청소년 영양 불평등 해소)



팀 명	노생노사
제안명	노노시장(老老市場) 조성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요지	노인이 생산한 노인친화형 콘텐츠를 노인이 소비하는 노노시장 조성을 위해 서울형 노인일자리유형 신설, 노노소비마우치 발행,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

제안요약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등장배경 및 현황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등장배경

- 급격한 고령화속도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
- 연금의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 속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전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등장

2)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실태 및 제도현황

-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전체 노인의 30.9%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7.7%로 나타났음
- 본 제안서가 신규 노인일자리 유형개발을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유형은 공익형으로 공익형의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대상	유형	내용	참여율	활동비
기초 연금 수급 자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이 돌봄서비스 제공	24%	월 최대 27만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에게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4%	
	공공시설 봉사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	69%	
	경륜전수 활동	노인의 경험을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3%	

2.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문제점1 : 노인의 경험, 지혜 등을 살리지 않은 단순일자리 위주

- 현 공익형 일자리는 거리환경 개선 중심의 단순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그 중 경륜전수활동이 노인의 지식,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나 수요처의 수요와 참여자의 참여율이 부족해 3%에 불과

2) 문제점2 : 일자리의 수익성 부족

- 근로노인의 72%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보충을

위해 설계된 시장형 사업단의 월 평균 임금은 27만 3천원에 불과

- 시장형 사업단과 공익형의 임금은 같고 노동강도는 시장형 사업단이 강하여 공익형에 쏠림 현상 발생 하지만 공익형의 활동비로는 실질적인 소득보충이 어려움
 - 시사점 : 수익성 높은 일자리유형 개발을 위해 경륜전수활동 분석 필요
- 공익형과 시장형사업단의 임금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공동구매가 필요하지만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단순일자리로는 민간수요를 끌어들이기 어려움
- 경륜전수활동은 단순일자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 공공과 민간의 공동구매의 가능성 높음
- 그러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경륜을 구매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의 경륜이 왜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지를 분석하면 수익성 높은 일자리 유형을 개발할 수 있음

3. 노인의 경륜이 거래되지 못하는 원인

- 1) 수요 차원: 현대화에 따라 낙후된 노인의 경륜
 - 급격한 시대변화로 노인의 경륜이 낙후되어 원하는 사람이 드물어짐
- 2) 공급 차원: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특성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학력의 학력 중 대졸은 3.8%에 불과
 - 저학력자의 노인이 쌓을 수 있는 경륜은 제한적이며 자신의 경험을 구매 가능한 콘텐츠로 생산하는 방법을 모를 가능성이 큼
 - 결과적으로 노인의 경륜을 토대로 만든 콘텐츠를 생산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며 이를 극복할 성공사례를 통해 대안 도출 필요

4. 일본 스가모 거리 사례 : 답은 노노시장(老老市場)이다

- 1) 일본 스가모 거리 소개
 - 스가모 거리는 매해 700만명의 어르신이 방문하는 일본 노인의 흥대라 할만 한 곳임
 - 스가모 거리엔 젊은이들이 잘 소비하지 않는 일본 민중가요 “엔카”, “장수를 기원하는 빨간내복” 등 노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팔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편임
 - 스가모 거리엔 직원도 상당수 노인으로 노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하고 있음
 - 시사점: 대안으로서의 노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및 노노소비바우처 필요
 - 사례를 보면 노인이 노인취향에 맞춘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노인이 소비함으로써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즉, 노인이 생산한 것을 노인이 소비하는 **노노시장(老老市場)**이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노인일 자리를 창출할 대안임을 알 수 있음
 - 노노시장 조성을 위해 생산자 차원에서 **노인친화형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인을 육성할 교육 필요

- 노노시장 조성을 위해 소비자 차원에서 노인이 생산한 노인친화형 콘텐츠를 부담 없는 가격 선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노소비바우처 발행 필요

5. 정책 내용

1)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신설

대상	유형	내용	급여
만 60세 이상 서울시민	노노여행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노인에게 여행 VR영상을 제공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배분
	노노품바	노인에게 인기가 많은 품바를 노인에게 시연	
	노노연극	노인의 삶의 에피소드를 엮어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연극 제공	

2) 노노시장 조성을 위한 3대 정책과제 (정책인프라구축, 노인생산자육성, 노노소비활성화)

- 정책인프라구축 추진전략: 조례신설, 협력기관 간 MOU 체결, 시범사업추진기업 지원금 지급
- 노노소비활성화 추진전략: 노노소비바우처 발행, 콘텐츠접근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노인생산자 육성 추진전략: 서울형 노인일자리유형 신설, 생산자역량강화 교육



〈그림1〉 정책과제 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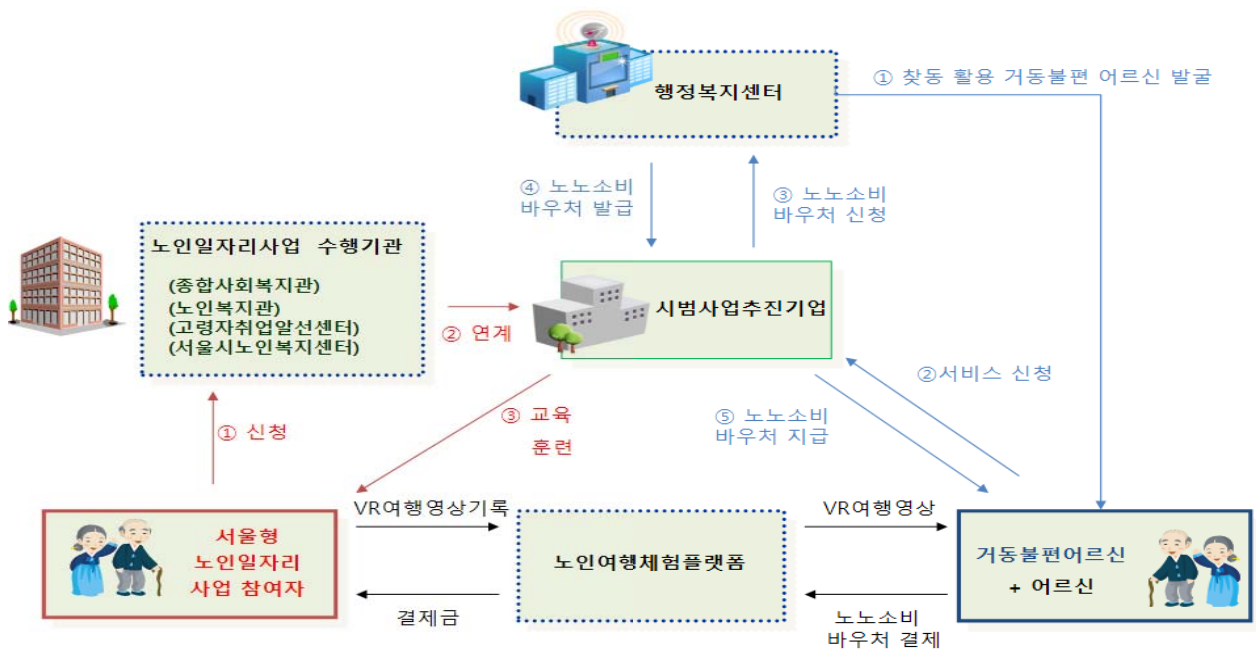
3) 정책로드맵



〈그림2〉 정책로드맵

- 서울형 노인일자리사업유형 신설, 노노소비바우처 발행,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노노시장을 형성하도록 지원 노노시장이라는 블루오션 창출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
- 스가모 거리가 외국인, 젊은이들도 찾는 명소가 된 것처럼 노노시장을 확장해 노인이 생산한 콘텐츠를 노인 이외의 계층이 소비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4) 3대 시범사업 중 노노여행 사업추진방법



〈그림3〉 노노여행 사업 추진 프로세스

6.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완전고용 실현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노인참여형 공유경제 활성화, 노인부양비 감소
2. 사회적 효과: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모델화, 노인인식개선을 통한 연령주의 근절, 노인경험의 사회자산화

팀 명	리베로
제안명	2030 청년 여성 맞춤형 팀스포츠 지원정책 “자유로운 몸을 향한 도움닫기”
제안요지	청년 여성은 사회의 몸매관리 압박으로 인해 자기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본 팀은 청년 여성의 신체 경험을 고려한 성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청년 여성 대상 팀스포츠 교육, 활성화 사업을 제안한다. 제안 정책은 서울시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과 서울시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제안요약	
<p style="text-align: center;"><i>“20대에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붙고 나서 내가 경유하게 되는 운동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헬스, 요가. 그 운동을 한다는 게 저에게 다이어트로 각인되어서 싫어졌던 거 같아요.”</i></p> <p style="text-align: center;">- 청년 여성 4명의 축구 도전기 <육체미소동>(2016) 출연진 인터뷰 중</p> <p>■ 몸매 관리 압박으로 인한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p> <p>청년 여성은 여성 안에서도 몸매 관리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큰 세대다. 마르고 날씬한 몸매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회적 환경 하에서 청년 여성들은 본인의 체형을 실제보다 비대하게 인지한다. 자기 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은 섭식장애와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9배, 30대 여성은 3배 많았다. 이처럼 젊은 여성의 섭식 장애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에게 마르고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 <p>■ 다이어트가 목적이 된 여성 생활체육,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청년 여성</p> <p>하지만 청년 여성들이 몸에 대한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다. 군살이 없는 만큼, 근육도 없는 매끈한 몸을 만들라는 사회의 비정상적인 요구는 여성에게 몸 선을 다듬는 정적인 운동 즉 몸매관리운동으로 꼽히는 ‘여성적인’ 스포츠와 식단 조절(다이어트)만을 허락한다. 이는 남성들의 신체 활동이 어떤 의도에서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전문 체육 선수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여성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여성적’ 종목에 한정해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운동의 목적이 몸매 관리의 수단으로 여겨지면,</p>	

신체활동을 통해 마른 몸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기형적이게 마른 체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자기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는 여가 목적의 스포츠 활동이 개인의 신체 만족감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효과와 상반된 결과다.

■ 성별에 따라 다른 스포츠 동호회 장벽

동반 참여자가 있는 스포츠 동호회는 회원 간에 스포츠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흥미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동호회원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게 비해 전 연령대에서 낮았다. 동호회 가입 종목도 성별에 따라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운동 동호회는 양적으로도 적고, 그 안에서도 ‘남성적인’ 스포츠 종목은 더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다이어트 외의 흥미 동기로, 다양한 체육 활동을 시작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 2030 청년 여성 맞춤형 팀스포츠 지원 정책, “자유로운 몸을 향한 도움닫기”

체육, 스포츠 활동은 신체, 기능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차원의 성격을 가지는 다차원적 활동이다. 운동의 목적과 방법이 다이어트에 한정된다면 스포츠 참여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신체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참여하는 신체 활동의 방식이 바뀔 때, 스포츠 참여를 통해 산출되는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정책안은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대치되는 ‘남성적인 스포츠’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를 포함한 팀스포츠를 청년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정책안 ‘2030 청년 여성 맞춤형 팀스포츠 지원 정책’은 활성화 사업과 교육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활성화 사업**은 여성의 팀스포츠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참여 여성들 간의 생활체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이어나가고 서로의 신체 활동과 다양한 몸을 긍정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도록 촉진한다. 이는 발굴, 자원 지원,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된다. 청년 여성이 참여 가능한 팀스포츠 동호회를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등록된 동호회에게 코치, 운동용품, 시설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자치구 소속 여성 동호회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 지역사회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한다. 더불어 초심자 신생 동호회를 위한 리그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회가 실전 경험을 쌓으며 지속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교육 사업은 팀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획되었

다. 여성 코치 및 성인지 교육 전문가와 함께 여성들이 서로의 신체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동시에 여성 스포츠에 관한 성인지 교육을 제공받는다. 구체적으로 12주 동안 기존 여성의 신체 활동 방식과는 다른 팀스포츠 활동과 실전 플레이를 진행한다. 마지막 12주차 이후에는 참여자를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청년 여성동호회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여성이 지속적으로 팀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서울시 청년 여성의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본 정책은 청년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이 겪는 부정적인 신체 인식의 문제를 완화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남성적인’ 스포츠의 여성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 여성들은 사회의 획일화된 신체 이미지와 다른 자기 몸을 긍정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청년 여성들이 유입되고 지원을 통해 견고해진 청년 여성 팀스포츠 동호회는 회원의 스포츠 활동에 흥미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회원 개인의 변화를 지지해주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통해 정책 유관관계자들은 청년 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욕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후 청년 여성의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청년 여성 당사자를 포함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팀 명	복지실미도
제안명	장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안요지	기존 정책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및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장년 남성 1인가구를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함.
제안요약	
<p>1. 사업배경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장년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 1인 가구의 주된 이슈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청·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일·가정 양립 및 젠더 관점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기존 복지정책이 ‘전통적 가족형태’에 주목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2016년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마련함. 1인 가구의 복지 지원을 특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주거복지 사업,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집중되어 있음. ○ 한편, 돌봄의 사회화란 의제로 논의되는 추세이긴 하나 공론화 및 사회적 관심은 부족함. ○ 현재 돌봄영역 중 가사노동과 관련한 서비스는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거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정 내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하는 실정임. ○ 최근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함. ○ 한국가족 형태와 기능은 수정확대가족으로 변화하며 그 역할과 기능 또한 변화하고 있음. 하지만 현 한국사회의 50대 이상 장년 남성의 경우 전통적 1인 생계부양자로서 주로 경제활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생활과 관련된 역할과 기능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 이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형태로의 전환에서 남성의 경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통적 가족 내 수요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정책적 사각지대이며 가사노동에 취약한 장년 남성 1인 가구의 돌봄과 관련한 공적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함.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 맞춤형 제도화 추진

3. 주요내용

- 대 상 : 장년 남성 1인 가구
 - 사업내용 : 신청자에 한해 소득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자격 검토 후 진행
 - ① 정부지원 자격 대상 : 재가관리사업의 확대 시행 제안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한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가관리사업의 대상자를 장년 남성 1인 가구로 확대
- 정책적 사각지대인 장년 남성 1인 가구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근로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가사근로자 등) 연계 및 기존 정책의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을 도모하여 서비스 제공의 폭을 확대
 - 실질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맞춤 서비스 지원
- ② 정부지원 미자격 대상 :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결합
- 서울시가 운영 위탁한 민간 인력사무소의 서비스를 일정 금액 부담 후 이용
- 기존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개별적 복지 지원 단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3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기준) 장년 남성 1인 가구 만 50~64세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아래 서비스가격표 참고
 (제외대상)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 유사 가사서비스(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등), 기타 재가서비스

*소득기준 관련 : 중위소득 160%(2,675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83,531원/지역가입자 82,664원/혼합 84,229원)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 방, 거실, 욕실 주방, 현관, 베란다 청소
- 세탁, 빨래 개기기
- 설거지

부가 서비스

- 비정기적인 냉장고청소, 레인지, 후드청소 등
- 특별한 날(계절별 대청소, 김장, 이사청소, 장 담그는 날, 생일잔치, 집들이 등 가혹행사)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서비스대상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지원

소득기준		지원 비율 (단위 %)	
		정부	본인
중위 소득	300% 초과	0	100
	200% 이상 ~ 300 미만	10	90
	160% 초과 ~ 200% 미만	60	40
	140%이상 ~ 160%이하	97.7	2.3
	110%이상 ~ 140% 미만	98.2	1.8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98.7	1.3
차상위 계층		99.35	0.65
기초생활수급자		100	0

4. 기대효과

- 장년 1인 남성가구의 생활 안정화
-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구축을 통해 서울시 맞춤형 제도화 추진
- 보수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서비스 근로자 처우개선
-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정책 활용 및 민간업체 연계를 통한 초기 정책 비용 절감

팀 명	중잘기잘
제안명	한 끼를 부탁해
제안요지	현재의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 4조 및 제 35조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에 근거해 아동급식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요약

첫째. 아동 급식카드 지원 적정단가의 산정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결식우려아동급식카드는 ‘꿈나무카드’로 2016년 7월부터 한 끼 식사에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대로 음식점에서 영양가 있고 맛있는 한 끼를 사먹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식우려아동들은 편의점¹⁾에서 저렴한 라면이나 삼각김밥(7.8%)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식아동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서울시 ‘꿈나무카드’의 지원 금액을 6000원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표 IV- 30 ■ 2015년 8월 편의점 A사 서울시 전 지역 꿈나무카드 결제 내역

품목	건수	비율
도시락	7,133	2.7%
삼각김밥, 기타주먹밥	20,224	7.8%
김밥류	3,239	1.2%
샌드위치	4,813	1.8%
햄버거	6,774	2.6%
핫도그	1,011	0.4%
냉장피자	1	0.0%
빵류	18,863	7.2%
떡	85	0.0%
젤리, 푸딩류	4,876	1.9%

둘째. 꿈나무카드와 ‘서울페이’의 연동을 통한 낙인감 해소

○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의 낙인감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시스템과 카드 디자인이 아동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결식우려 아동들이 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식사 시간을 피해 이용하여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표 IV- 78】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꿈나무카드 이용거부 이유

(단위 : %, 명)

꿈나무카드 이용거부 이유	비율
혼자 식사하기 싫어서	33.3
학교 친구들이 알까봐	27.8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7.8
기타	11.1
합계	100.0
응답 인원 합계	18

출처: 결식우리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이승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서울페이’를 도입하여 꿈나무카드의 한계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페이는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가게 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구조다.

○ ‘서울페이’와 꿈나무카드를 연동한다면 ① 꿈나무카드 전용 결제 단말기 없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②아이들이 음식을 구매할 때 직접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꿈나무카드 사용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올바른 식습관 의식 함양

○ 꿈나무카드를 이용한 아동급식 지원체계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이용 편의성과 관리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에는 기여하였으나, 아동이 영양균형을 이룬 식사를 하기 보다는 간식을 사는데 이용하거나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을 이용하여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더욱이 2017년 서울시 청소년의 비만율도 13.5%로, 2010년 8.1%에 비해 최근 7년간 5.4% 증가하여 서울시 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점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급식사업에 대한 아동의 의존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꿈나무카드 사용으로 인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동 스스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올바른 영양 및 조리 교육이 필요하다.

○ 따라서 찾아가는 영양개선 교육 프로그램 ‘달려간다 삼시세끼’를 제안한다.

- ‘달려간다 삼시세끼’는 아이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함께 위대한 식품 성분을 선별하고 골고루 먹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

러한 식생활 체험교육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아동,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달려간다 삼시세끼’ 트럭의 장점은 아이들이 직접 요리체험과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동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먹거리가 풍부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도 다양한 먹거리와 영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예시〉 : 호남대학교 튼튼먹거리탐험대



제안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 다양해진 한 끼

- 금액 인상으로 인한 **음식 선택의 폭이 넓어짐**
- 폭 넓은 음식선택으로 인한 **자유권 보장**

2) 당당해진 한 끼

- 기존 카드 디자인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아동의 자신감 향상**
- 서울페이와 연동하여 **결제의 편리성 강화**
- 더 많은 가맹점과 **함께하는 아동**

3) 건강해진 한 끼

- 식습관 인식 개선을 통한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
- 모든 아이들의 **건강 평등 실천**
- 아동들의 **면역력 강화와 정상적인 신체 발달**
-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1)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이승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